

인권정보자료실

R1.1.6

# 인권하루소식

합본 VI 호  
(501호 ~ 674호)



1996. 9.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합본 VI 호 (501호 ~ 674호)

인권정보자료실  
R1.1.6

인권운동사랑방





### <자료> 어린이 성폭력의 실태 및 특성

-95년 1년간 성폭력상담소 접수 피해 사례-

#### 1.피해유형

피해유형은 크게 강간과 성추행으로 나뉜다. 전체 성폭력 피해 상담중 어린이 성폭력은 3백7건으로 30.1%를 차지했고, 그중 어린이의 피해가 2백1건으로 65.5%를, 유아가 1백6건으로 34.5%를 차지했다.

또한 일반 피해유형은 강간이 성추행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지만 어린이의 경우 성추행이 61.2%로 강간의 38.8%보다 좀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2.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

피해자의 95.4%가 여성이고 가해자의 99.4%가 남성이다. 따라서 성폭력은 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폭력임을 알 수 있다.

#### 3.가해자와의 관계

어린이성폭력의 경우 78%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했으며,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는 19.6%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아버지나 친오빠등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 1백1건이나 차지해 친족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4.주변의 대응방식

부모가 무기력해지고 목인방치하거나 심지어 가해자를 두둔하는 태도에서 역시 친족 성폭력의 경우

13.7%이고 가족외 아는 사람일 경우 0.6%, 모르는 사람일 경우가 5.6%로 나타나 친족 성폭력의 경우 일관되지 못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5.법적 측면

어린이성폭력 고소율은 상담건수의 19.2%로, 일반 상담의 전체 고소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소가 가능한 요인으로는 피해자 본인의 의지와 증거(증인)확보, 가족내 지원자 확보로 인해 가능하며 고소하지 않는 이유는 증거 불충분과 고소시효를 놓친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 6.남자어린이 피해

95년 남성피해는 전체 일 반상담 중 49건으로 4.8%였다. 그리고 남자어린이 피해도 14건으로 지난 92년의 2%에 지나지 않았으나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어린이의 경우 여자 어린이와 비슷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성인이 된 후 또다른 가해자가 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7.피해자와 가해자 나이 (아래 표 참조)

구독료는 아래 지로로

761848

가해자 피해자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미상	계
유아	5	10	34	51	6	106 (35.2%)
어린이		9	39	135	18	201 (64.8%)
계	5 (1.6)	19 (6.2)	73 (23.8)	186 (60.6)	24 (7.8)	307 (100.0%)

#### 교육개혁 1년 변화 전무 전교조, 교육주체 참여 요구

5·31 교육개혁안 발표가 1주년을 맞았지만, 1년이 지난 학교현장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4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혜숙, 전교조)이 전국교사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서도 교사들의 50%가 "교육개혁 추진이후 학교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 30일 전교조는

△학교운영위와 관련된 민주적 운영의 문제 △종합생활기록부 도입의 문제점 △교육 불평등의 초래 △교육 재정 운용방침 미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학교운영위에 학부모·교사·학생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적절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다양한 교과과정과 교육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생부는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 ○행사와동정○

#### □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 설명회

- 일시: 5월 31일(금) 오후 4시
- 장소: 한국통신노조 제1교육관(766-4020~3)
- 주최: 공공부문노조 대표자회의(879-0057~8)

#### □ 학생운동 탄압 저지를 위한 전국학생투쟁연합 투쟁위원회 기자회견

- 일시: 5월 31일(금) 오후 1시
- 장소: 연세대학교 도서관 앞
- 주최: 서울대 총학생회등 18개 총학생회와 서울 전문대 총학생회 협의회(760-1411)

#### □ 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회의

- 일시: 6월 2일(일) 오후 1시
- 장소: 보라매 공원
- 주최: 공공부문노조 대표자회의(879-0057~8)

#### □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발족 및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법률상담소 개소식

- 일시: 6월 3일(월) 오전 10시
- 장소: 서울지방변호사회관(신축회관 1층)
- 주최: 서울지방변호사회(522-9100)

#### □ "지방언론의 현황과 발전방향" 토론회

- 일시: 6월 4일(화) 오후 2시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 주최: 바른언론을 위한 시민연합(734-4100)

#### □ 제17기 언론학교 수강자 모집

- 일시: 6월 18일(화)-7월 27일(토)까지
- 접수기간: 6월 17일(월)까지
- 회비: 일반인 7만원(「말」 정기구독자 6만원)
- 장소: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교육관
- 주최: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언론학교(326-1252)

#### □ 가톨릭 청년 백두산 순례단 모집

- 일시: 7월 7일(월)-13일(토)
- 접수기간: 5월 31일(금)까지
- 주최: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사무국(3672-0251)

#### □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정신대 할머니들이 모여 생활하는 나눔의 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자원봉사 내용은 할머니들에 대한 봉사에서부터 정신대운동 홍보등 다양하다. 문의 0347-64-0064.

# 인권하루소식

## 96년 6월

(제655호 - 제674호)



<이달의 주제-주거권>

주거는 인간답게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 입장-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 수사기관, 멋대로 접견제한

### 나사청 회원 면회블허 ... 형소법상 권리보장

피의자 접견권이 형사소송법상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측이 임의대로 이를 제한해 항의가 벌어지는 일이 아직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31일 오후2시 나라사랑청년회 회원 10여명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서형준(32)회장과 서미연(30), 황윤미(28)씨를 면회하기 위해 남영동 대공분실을 찾아가했으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회를 거부당했다.

대공분실 관계자들은 "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면회를 시킬 수 없다" "내규상 가족외에는 면회를 시킬 수 없다"며 접견을 거부했다.

이에 나사청 회원들이 접견권 보장을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하자 "이렇게 떼가지고 와서 소란을 벌이기 때문에 면회를 시킬 수 없는 것 아니냐? 따로따로 조용히 찾아오면 면회를 시켜줄 수도 있다"고 하는 등 임의적으로 접견권을 제한하는 모습마저 보였다.

결국 나사청 회원들은 1시간에 걸친 설전 끝에 면회를 다음 기회로 미루고 자리를 떠났다.

한편 가족이외의 친지들의 접견은 형사소송법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수사기관의 접견권 제한은 수시로 발생하며, 변호사들이 접견거부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법원에 제출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적용의 불법성을 인정받은 사례도 빈번히 일었으나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나사청대책위는 이후에도 구속자들에 대한 면회를 꾸준히 시도하는 한편, 2일 보라매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공안정국 조성음모 규탄과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기로 했다.

## 좌경척결발언 파장비난 AI, 전학련등 석방촉구

엠네스티(AI)는 31일 이수성국무총리의 '좌경척결' 발언 이후 전국학생정치연합 등 국보법으로 많은 구속자가 생기는 현상항을 비난하며, 김대통령과 이총리, 안우만법무장관에게 항의서한을 보낼 것을 요청했다.

또한 AI는 5월 한달간 국보법으로 구속된 28명은 모두 양심수라며, 이들의 석방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보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 전국연합통신 100호 민족민주정론지로 출발

주간 <전국연합통신>이 통권 1백호를 맞아 소식지에서 내용을 심층·강화해 민족민주정론지로 새롭게 출발한다. 김성희(34)편집장은 "94년 5월 발행당시에는 민족민주운동의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했으나, 이제는 민족민주운동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정론지로써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연합통신>은 60쪽에서 1백여 쪽으로 분량을 늘렸고, 주간에서 격주간으로 체계를 바꾸었다. 가격 2천5백원(문의:747-43645).

## 해고자 복직, 단결권 보장 요구

### 공공부문노조 2일 대규모 집회

「공공부문 노조대표자회의」(공동대표 장대익등, 공노대)는 31일 한국통신노조교육관에서 임단투 경과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는 지난 4월23일 한국통신노조등 공노대 소속 노조간부회의에서 임단협 시기와 목표를 통일시키기로 결의한 이후 그간 진행된 투쟁에 대한 보고자리였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경수 공노대 집행위원장은 "공동투쟁 목표로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원직복직과 전임자 축소 반대, 교사·공무원의

단결권보장 등을 내걸었다"며 "이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투쟁 할 것이고, 파업결의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노대는 2일 보라매공원에서 소속노조 조합원 총회를 열어 대정부투쟁을 결의하고, 공동투쟁 결의를 전 조합원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공노대는 한국주택공사노조(위원장 장대익)등 1백29개 노조, 14만4천7백3명의 노조원을 포함하는데 이는 전체 공공부문의 67%에 달한다.

## "쌀지원 허용하라" 전국연합 민간허용촉구

전국연합은 31일 성명을 통해 민간단체의 대북 쌀지원활동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민간단체의 대북수혜 지원사업마저 사법처리라는 족쇄를 채우려는 것은 '국가권력을 악용한 비이성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전국연합은 5월30일 현재 5천5백여 만원 상당의 쌀(1백10가마)과 현금을 모금했으나 통일원측이 "절대 쌀과 현금을 직접 보낼 수 없다"며 거절해 무더운 날씨에 쌀이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우리시대 인권상황판  
<인터넷 인권하루소식>  
한국인권상황을 전세계에 고발합니다  
접속주소 <http://www.hnc.net/~rights/>



### <인권하루소식> 96년 5월분 총목차(633-654호)

호	월일	면	기사 제목
633	5/1	1	여성노동시장정책 공개토론회, 신인력정책이 여성노동자 주변화 우려/106주년 세계노동절 각계 노동악법 개정 촉구 성명 발표/일본 491개 단체, 범민련 구속자 석방촉구 서명/경찰, 우상근씨 제3차개입 적용 안되자 국보법 적용으로 검거 전력/주요공판안내
		2·3	<인권하루소식> 96년 4월분 총목차
634	5/2	1	106주년 노동절 기념, 민주노총 집회 1만 여명 참석/학생들 대화요구 거부하며 경원대학 측 4명 제적 등 학생 다시 중징계/LG그룹 해고자노동자, 본사 건물에 계란 던지며 복직 촉구
		2	<교통권 심포지엄 지상중계> 교통서비스는 의료서비스와 같은 현대인의 기본권/현장방문과 심포지엄 개최, 한국·베트남·중국의 여성운동가들 한자리에
		3	<동티모르민중저항평의회 칼로스 미야씨 방한 "동티모르인의 투쟁에 한국민의 연대를!">/<현장스캐치-노동절기념식 열린 보라매 공원> 다양한 계층이 참석한 노동자 축제 5·19행사위, 영역별 제조업 작업 광주항쟁 16주년 맞아, 학술·문화행사 줄이어/참여연
635	5/3	1	대, 내부고발자 보호 조례제정 촉구
		2	노동운동가 유구영씨 2일 별세 "동지와 민중에 대한 사랑, 건강" 당부/미군 공여지문제 현안으로 등장한 쇠목마을 실태 "내망 사용도 미군허가 받아야"/행사와 동정
636	5/4	1	경원대, 회색가면 쓰고 협상나서 학생 11명 추가 고발, 공권력 투입 요청/미군공여지 반환 미군기지앞 시위 쇠목마을투쟁, 전국적 확산 기미/전장일씨등 범민련관련 재판에서 변 호인단 제보자 증인신청
		2	구타여성, 법률지원 절박 '이상화할머니사건 미연에 방지하자'/두말마을학교 현판식, 폐교 철회소송 지연/합법출판도 국보적용, 사노맹 정역5년 구형/선명회·환경운동연합 "체르노 빌을 돕자"/동두천 산불참사에 미군측 배짱, 위로금 "60만원만 먹이라"
637	5/7	1	노조 간부 공권력 투입에 항의 2명 분신, 경찰은 화염병 사용으로 인한 과실 주장/분신한 이진권부위원장 인터뷰 "끝까지 싸워 승리의 기쁨을 전해달라"
		2	'이적표현물 탐독' 전공관련 무죄선고/동외대사건 7주년, 법적 진상규명 요구/광주 인권지 기 창립, 인권감시·보장 한몫 다짐/주간인권호름(4월29일부터 5월5일까지)
638	5/8	1	재개발 시행에 주민의사 무시, 신림동 재개발지구 주민들 주거권 보장요구/현중, 산업안전 은 뒷전으로 하고 노조간부 고소/주요공판안내
		2	우토로마을 한인경제정용자들에게 일본대기업 소유권 주장하며 퇴거통보/동아리 강제 해 체 협박에 항의, 대구공전 박동학씨 분신 중대/박노해씨 후원모임 결성 "양심수 석방의 첫발"/아시아시민사회연구모임, 한국사회교육원 모집/인권협 대표단체로 천주교인권위 선 출/불교인권위, 복측에 인권기도문 제안 24일 함께 낭독
		3	<자료>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639	5/9	1	'좌파 대청소' 작업 노골화, 정치·학생조직 및 노동진영까지/주택공사 공권력요청으로 재 개발지역주민 연행/12일 최종진 후원기도회 "농민운동의 희망을 살립니다"
		2	기획시리즈① '세계의 인권' 연재를 시작하며 "모든 이는 다른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 할 의무가 있다"/민주노총, 정년 60세로 연장하는 법개정 요구/과거 행적에 낙인, 사노맹 무조건 유죄
640	5/10	1	기무사, 언론기관에 불법 압력행사 주간 시사뉴스, 임재문사령관 비리 보도 예정/학생과 장이 불 붙었다" 대구공전 분신 박동학씨, 사망전 발인 파장/민주노총등 23개 단체, 한국 합성사태 강경대응기로
		2	검찰, 범민련 중앙간부들에게 "불순세력 득세"이유 중형 구형/LG그룹 해고노동자 집회 계속/여성의전화 회원들, 이상화할머니 석방 촉구 시위/행사와동정
641	5/11	1	"원진 노조위원장 취임시킬 수 없다" 기능사 자격증 따면 무조건 취업은 거짓말/전학련 3 명 추가구속, 군복무자 연행제보/경원대교수, 협상요구하는 학부모 폭행 "야, 이 미친년 아" 욕설, 구타
		2	노사개혁위에 우려반, 기대 반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요구하는 영흥도주민 3명 구속/인 권간행물
642	5/14	1	한국합성 노·사 협상제기, 협상결과에 따라 텐트농성등 집회전개/브라질 경찰, 무소 유농민 학살/일본 범민련구원회 모금, 홍보활동 벌여/전학련 2명 추가확인
		2	<자료> 서울고법 국보법 동조죄등 무죄판결/주간인권호름(5월6일부터 12일까지)

### <인권하루소식> 96년 5월분 총목차(633-654호)

호	월일	면	기사 제목
643	5/15	1	기무사 비리고발 언론인 연락두절 시사뉴스, 기무사령관 비리 전면 고발/한국합성, 고소·고발취 하등 잠정합의/여성민우회 27일부터 예비 신랑·신부학교/주요공판안내
		2	계속된 노조의견 외면하고 현중, 산재문제에 대해적으로 투자키로/미군범죄 공론화해야' 미국제 소 청원운동 전개/주거회의 NGO 공동대표 방한, 김덕룡장관 만나 주거회의 홍보요청/참여로 학 교를 바꾸자, 교사·학부모·시민 선언
644	5/16	1	기무사·경찰, 시사뉴스 발행인 강신한씨 집중추적/부천 대흥기계, 노사합의로 '작업중지권' 확보/ 고예순씨 국가상대 손해소송 첫재판/공동육아연구원 27일부터 방과후 프로그램 교육
		2	여연등 단체들 15일 '가정폭력방지법제정 특별위원회' 구성/노나메기 판결에서 재판부 "좌경사상 좌시못하나 넓은 아량으로 집유 판결"/임재문기무사령관의 충격적 비리, 시사뉴스 제82호 인용
645	5/17	1	대구공전 사태, 분신조장 의혹 학교측 되래 유가족 고발/경찰, 이적단체 혐의로 전학련 22명 구 속·수배
		2	정부책임자 처벌·구속노동자 석방 필요 "한국합성 사태, 끝나지 않았다"/민주노총, 현중씨 노 동자 천시 발인에 사과요구 성명/필리핀·대만등 일본측의 위안부 문제 회피에 항의/양심수석방 남북 공동기도, 조선불교도연맹 전문 보내/가정폭력방지법제정특위 긴급공청회/행사과동정
646	5/18	1	시민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청년캠프 열어 "역사는 인간성 회복을 위한 투쟁과정"/전국 서 5·18국민대회 '미국사죄, 악법철폐'촉구
		2	민주노총, 노사관계 개혁 정책세미나, "법·의식 개혁, 노사개혁의 전제"/제일동포·동티모르·독 일의 인권문제
647	5/21	1	전국연합, "정부 창구일원화로 전달 지연" 북한수재민돕기 현금 8천76만원/대구공전 사태 해결기 미 보이려나?
		2	5월민중항쟁 16주년, 광주표정 "전국 추모행렬 끊이지 않아..."/주간인권호름(5월13일부터 19일까 지)
648	5/22	1	마산 한국산본 해고노동자 16일째 농성/아시아 인권 운동가 서울 방문/주요공판안내
		2	제2회 세계주거회의 개막 10일전 "민간·정부 연대, 지속가능한 개발모색"/김경정열사 5주기, 열 사 10일 합동추모제/전국연합 철새당선사 비난 "민의 저버린 처사"
649	5/23	1	범민련 간부 대부분 집유 "재판부가 무죄 인정한 셈"/대구공전 2차협상 결렬 "3천만원으로 해결 하자"/핵발전소 사고 잦아 주민들 계속 투쟁
		2	외자회사 노동자 고용불안대책 절실, 한국산본사태 '자본철수 위한 사전정치작업'
		3	세계인권② 실종-"우리가 그들은 잊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실종'되는 것이다"
650	5/25	1	석탄일 가석방 양심수 완전 배제/농성·서명운동은 지속하며 경원대생 수업복귀키로/구속만기 직 전 보석허가, 광주 진정연 8명 풀려나/26일 이재호열사 10주기, 추모모임 8월 발간 예정
		2	강희남 목사 무기한 단식 돌입, 구속 통일인사 무죄석방 요구/인권간행물
651	5/28	1	5·18피해자 증후군 연구발표, 불안·우울·신체 증후군에 시달려/통일원·안기부 압력에 남북불 교 공동기도 무산
		2	일본 우토로마을 26일 대규모집회, 인권협·참여연대 지지성명과 대표단 파견/재판부 국보법 필 요하다며 범민련관련자들 실형선고/주간인권호름(5월20일부터 26일까지)
652	5/29	1	'기무사비리, 법정에서 밝혀질까' 기무사, 시사뉴스 상대로 가처분신청/주요공판안내
		2	'좌경소탕작전' 이번엔 전학련, 국보법 혐의로 2명 연행/우토로집회를 다녀온 김경남목사 인터뷰 "그들은 들뜬처럼 버려졌다"/주거회의 참가자들 출국전 기자회견/전여농, 여성농민의 지위향상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
653	5/30	1	"자고나면 또 구속, 내일이 두렵다", 서울·대구지역 국보법 위반혐의 12명 구속/경원대 협 상 제자리, 학교측 합의된 의제 거부
		2	제일동포 장기수 이성우씨, "가족이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며 행정심판 제기/조작간첩 이성 우씨 인터뷰 "내 자식들은 '한국이 무섭다'고 한다"/AI, 웨이씨 석방 캠페인
654	5/31	1	서울시 주최 성폭력 세미나, 어린이 성폭력 78%, 주변사람 범행/인권협 대표단, 경원대 중 재 나서 경원대 총장 학교측 입장만 강변/서울청년단체 30일부터 나사청 구속자 석방 농성
		2	<자료>어린이 성폭력의 실태 및 특성(95년 성폭력상담소 접수 피해 사례)/전교조, '교육개 혁 1년 변화 전무'라며 교육주체 참여 요구/행사와 동정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이달의 주제-주거권>  
주거는 인간답게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 입장-

## 학살자 처벌요구 단식농성 전국연합 법원앞 집회 ... 한총련 명동성당

12·12 및 5·18사건 제11차 공판이 열린 같은 시각 전국연합 회원 10여명과 한총련 소속 대학생 40여명은 3일 오전 9시 서초동 법원 앞에서 5·18학살자 사죄와 미국사과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또한 한총련은 학살자 처벌과 대신자금 공개를 미루고 있는 김영삼 정부에 대한 항의표시로 대규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전국연합, 법원 앞 집회  
전국연합은 "학살자들은 자신의 정당성을 강변할 뿐 전혀 참회하지 않고 있다. 이들을 용서할 수는 없다"며 30분가량 집회를 열고 '학살자 처벌' '미국사과' 등을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재판이 학살자들을 올바르게 단죄하는 역사적 심판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그간 행동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더 이상의 자제는 또 한번의 역사왜곡을 낳을 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학살자에게 수여된 서훈처탈, 5·6공 약법의 철폐, 학살공모 미군사죄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후 재판방청운동 등을 적극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 1백20여명 단식농성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은 대신자금 공개와 5·18관련자 전원처벌 등을 주장하며 1일부터 8일까지 명동성당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전국각지에서 모인 농성단은 첫날 86명으로 시작하는데 이어 2일엔 1백24명으로 늘어났으며, 현재까지도 농성자는 속속 불어나고 있다고 한총련은 전했다.  
또한, 한총련 소속 대학생 34명은 3일 오전 대신자금 공개와 신한국당의 부정당선자 처벌을 요구하며 청와대 항의방문을 진행하던중 전원 연행됐다.

기사제보 715-9185

## 안부편지 '통신'으로 께맞추기 2, 3월 구속 사노맹 10명 집행유예

지난달 31일 오전10시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최정수)는 사노맹 관련 혐의로 구속된 권순미(33,고대 정치학과 대학원)씨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초 권씨를 이적표현물 소지, 이적단체 가입 및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되자 이적단체 가입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내용을 취소했다.  
조광희변호사는 처음 검찰이 문제삼은 '통신'이란 것은 권씨가 94년 당시 교도소에 있던 사노맹 조직원 최현식씨에게 안부편지를 보낸 사실을 말한다며 전했다. 이것을 국보법상의 '통신'혐의로 몰아붙이기에 무

리가 있었고, 검찰도 무리함을 인정하고 공소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조변호사는 검찰이 '권씨가 사노맹을 찬양·고무하기 위해 『마르크스·엥겔스 저작선』 『국가와 혁명』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고 밝힌 최초의 공소내용도 "문제의 서적들이 일 반서점에서 판매했으며, 권씨의 전공상 필히 읽을 수 밖에 없는 책이라는 점에서 공소사실을 억지로 께어 맞춘 셈"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 2,3월 사노맹 관련혐의로 구속된 12명중 재판이 진행중인 민병래, 김영철씨 등을 제외한 모두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우리시대 인권상황판  
<인터넷 인권하루소식>  
한국인권상황을 전세계에 고발합니다  
접속주소 <http://www.hnc.net/~rights/>

## 시사뉴스 탄압중단 인권협 성명발표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승훈 신부, 인권협)는 31일 기무사의 주간 시사뉴스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인권협은 △기무사는 시사뉴스 발행인 강신한씨와 가족, 시사뉴스 직원에 대한 감시, 미행, 납치기도를 중단할 것 △국방부는 기무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 시사뉴스 보도의 진실을 규명할 것 △15대 국회는 '내부비리제보자보호법'을 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용철) △사법위(문병호) △노동위(이원재) △환경위(오종한).

## 강성구사장 즉각 퇴진 민연협, 합의서 이행하라

민주인론운동협의회(의장 김태진, 민연협)는 1일 MBC 강성구사장 사퇴와 방송문화진흥회에 합의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연협은 "강사장이 비대위 전원을 인사위에 회부하여 징계하려는가 하면, 강사장의 사주로 추정되는 노조사무실 침입과 문서철취 등을 통해 노조사찰 의혹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최영도변호사 선출 민변 새집행부 구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2일 양일간 제9차 정기총회를 갖고 임기 2년의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 회장에는 최영도변호사, 부회장은 안영도, 송두환 변호사가 선출되었으며, 사무국장은 백승현변호사가 선출되었다. 민변은 5개 상임위원회와 6개 상설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상임위원회>  
△회원위(류종원) △홍보, 출판위(차병직) △기획위(윤중현) △대의협력위(박수근) △국제연대위(조용환)  
<상설특별위원회>  
△사회복지위(박주현) △인권위(안산운) △경제정의위

## 항의방문자 전원연행 나사청 불구속 7명

지난 1일 나사청 회원의 구속에 항의하며 남영동 대공분실로 항의방문을 했던 나사청 회원들과 서울지역 청년단체협의회 회원들 40여명 전원이 연행돼 7명이 불구속 임건되고, 나머지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5만원에서 1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참여연대 서명직업

참여연대 맑은 사회만들기 본부는 4일 서울역 광장 서명직업을 시작으로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1백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간다.

## 구독료! 아래 지로로 납부

성실한 구독료 납부로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인권하루소식>에 힘을 주십시오.

지로번호: 7618848

## 주간/인/권/호/름 (96년5월27일부터 6월2일까지)

<27일>

공공부문노조대표자회의, 해고노동자들의 원적복직과 노조전위자 축소저지·임금인상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투쟁을 벌이기로/대검찰청 학원폭력실무대책회의 열어 '학교밖 폭력' 및 '청소년유해사범'에 대해 형사입건하기로/서울지검 공안부 '이적표현물 특별단속반' 구성해 좌익인쇄물 계속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혀

<28일>

도시개발공사, 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재개발아파트 승강기에 장애인시설을 갖추기로

<29일>

장대중(24)씨등 베트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 2세 30명, 국가상대로 42억1천3백40만원의 보상금 청구소송/대구·경북지방 경찰청, 해방노동자통일전선 결성한 혐의로 오상용(31)씨등 4명, 사노맹 가입혐의로 김세태(32)씨등 5명등 9명 국보법으로 구속/나라사랑청년회 회장 서형준씨등 3명 국보법 7조 위반 혐의로 구속

<30일>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 단기2년6개월을 선고받은 미8군 소속 배닛 빌리 리(18)이병 항소포기해 형 확정/노동부 최근 공공부분노조의 정의시기 집중등 연대투쟁과 관련해 불법파업과 제3자 개입금지등 불법행위에 대해 실정법에 따라 엄중대처키로/광주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 94년 6월 금호타이어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노조, 회사측에 15억 배상하라"고 판결

<1일>

서울시 서울 시내 5개 지역 5백71개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윤락여성1천6백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내 윤락여성 35% 돈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몸파는 길에 뛰어들 것으로 나타남/교육부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으로 장애아 초·중등교육 의무화됨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12개 장애아학교 건립에 나서스나 주민반발등으로 진척 못함

<2일>

새벽2시25분경 대구시 북구 아파트 신축공사장 15층 옥상에서 정기휴가 나온 육군 이현우(20·경남 울산시)일병 "병영 안에서의 폭행을 근절" 요구하며 50여미터 아래로 뛰어 내려 사망

<해설>=====

지난 30일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15살된 여학생 성폭행사건은 더 이상 가릴 것도, 버려질 수도 없는 우리 사회의 치부를 잔혹하게 드러냈다. 대낮에 학교에서 돌아오는 한 여학생을 30대 남자가 끌고 야산으로 가는 데도, 그 여학생의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으면서도 눈에서 일하던 마을주민들은 보복이 두려워 못들은 척했다고 한다.

우리는 지난달 5일 새벽1시경 경기도 안산시 주택가에서 30대 여인이 한 남자에게 폭행당한 채 숨져가며 도움을 청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이때 인근 주민들은 몸을 숨긴 채 참나무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디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것인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과제일 것이다.



<이달의 주제-주거권>

주거는 인간답게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 입장-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결사저지 경찰, 불법체류자 2명 연행에 전경 5백명 출동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서명작업이 4월말부터 진행된 가운데 출입국관리소, 안기부 등이 이를 막아나서는가 하면 공권력을 동원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3일 출입국관리소는 5백여 명의 전경경찰을 동원해 성남시 주민교회에 소재한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상당소)에 난입, 내팔노동자 부부를 강제연행해 갔다. 또한 이 과정에서 김해성(37·상당소 소장,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회장)목사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상당소 이경원(25)간사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서명작업에 들어간 뒤 안기부등으로부터 여러차례 '다시한번 공식적으로 서명작업을 벌이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협박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실제 2일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공공부문노조 결의대회에서 외국인노동자 20여명과 상당소 실무자 및 자원봉사자 등 40여 명이 서명작업을

벌일 때 출입국관리소 직원 10여 명이 집회장소까지 들어와 강제연행하려 한 것을 주변 노조원들의 도움으로 저지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은 바로 이날날 일어났으며, 보라매집회장소에서 본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다시 나왔다고 한다.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3일 낮12시경 출입국관리소측은 이날이 상당소 정기휴일임을 알고와 상당소로 들어가는 골목 2곳을 봉고 차로 막은 채, 외국인노동자들을 강제구인했다.

이 과정에서 상당소를 찾은 로잔 구릉(33·Rosan gurung)씨 부부와 산재노동자 아말 바하들씨 등 3명이 강제구인되었다. 그뒤 경찰은 산재를 당한 아말 바하들씨는 이후 시비가 생길 것을 우려해 풀어주었고, 법률상 문제가 없어보이는 불법체류노동자 로잔 구릉씨 부부를 봉고차에 태워 6시간 가까이 감금했다. 한편 아말 바하들씨의 연락으로 이 사실을 알게된

김해성목사와 실무자들은 오후 2시30분 상당소에 도착했으며, 출입국관리소측을 찾아가 연행중지를 요구했다. 이때 이해학(주민교회)목사등이 "6-7시간 감금된 내팔인 부부가 하루종일 아무 것도 먹지 못한 채 겁에 질려있으니, 성남경찰서의 보호조치 상태에서 상당소에서 숙박하고 심리적 안정과 출국준비를 한 후 김해성목사와 함께 출두하겠다"고 제언했으나 관리소측은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오후 8시경 경찰병력을 투입한 것이다.

**강제연행만이 대안**  
이미 오후부터 성남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40여명과 유가협, 시민등 60-70명이 연행중지를 요구하며 대치상태였는데, 출입국관리소측은 강제연행을 막아선 시민들을 강제진압했다. 심지어 내팔인 부부가 탄 봉고차를 지지하기 위해 차 바퀴 밑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도차를 움직여 이경원씨와 양혜우 상당소사무국장 이상황에 대해 이경원씨는 "불법체류노동자 2명을 잡기 위해 5백여명이 동원된 광경은 아주 끔찍했다"고 말했다.

무자비한 경찰의 공권력 투입과 김목사의 강제연행에 격분한 2백여명의 시민들은 성남 중부경찰서 앞에

서 연행지후부터 4일 아침7시까지 항의농성을 벌였다. 한편 김목사는 연행당시 머리부상으로 혈압, 구토, 어지럼증, 두통증세를 보였으며, 인하병원 이준희의사도 뇌의 컴퓨터 단층촬영등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경찰에 통보했으나, 경찰측은 이를 무시한 채 구속조치를 취했다.

**외노운동 탄압 선전포고**  
출입국관리소 문화준사계장은 "이번 사건은 단속기간에 벌어진 우연한 일일 뿐 상당소를 탄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출입국관리소 직원에 의하면 "어제 서명운동으로 인해 출입국관리소 상부로부터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을 출입하는 외국인노동자를 강제 구인할 것을 지시받고 출동했다"며 시인했다고 상당소측은 전했다.

상당소측은 "이번 공권력 투입은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대한 탄압이며, 외국인노동자운동을 향한 선전포고"라며 "정부는 이 서명운동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문제에 대한 국민홍보와 여론 확산을 우려해 이에 제기를 박고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외국인노동자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고 구성된 조직을瓦解하기 위한 음모"라고 주장했다. 이에 상당소측은 민주노총, KNCC등을 중심으로 대책위를 구성해 공동대응에 나선기도 했다.

하루소식 신청·재보문의: 715-9185

### 주요 공판 안내

□ 6월7일(금)  
박문형, 업무방해등, 오전10시, 합의3부, 418호 선고  
유현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속행  
성세경,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신진  
우회정, 김형철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선고  
박충렬, 국보법, 오후2시, 단독9부, 317호 속행  
유용기, 국보법, 오후3시, 합의1부, 319호 속행  
-이상 서울지법 형사국

## 노조활동 위축위한 손배소송 금호타이어측, 20억판결을 임단협 무기로

지난 5월30일 광주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황식)는 금호타이어(주)가 박병렬씨 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에서 "조합원들은 회사측에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는 쟁의행위가 금지된 방위산업체라는 점과 노조위원장이 독자적인 단체협약권을 내세우며 무성의하게 단체교섭에 임함으로써 파업과 그 과정에서 손해등을 촉발·확대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청구한 금액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회사측 관계자는 "판결자들에게 배상금을 받아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노조측은 "회사측이 소송을 제기한 의도는 단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의도는 재판에 진 박병렬씨 등 6명이 94년 파업 후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작년 10월 복직된 점, 별도로 진행된 5억원 손배소송에서 패소한 허용대씨 등 3명을 회사측에서 복직시켰다고 밝힌 점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금호타이어에서는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이 진행중이다. 노조측은 94년 파업이후 아직 해고, 사직 또는 대기발령(무임금 사원) 상황이 있는 장영열 전 노조위원장(대기발령중) 등 조합원 8명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으며, 회사측은 소송을 취하려는 대신 장위원장, 정광계 전부위원장(·), 신호식 전풍성지부장(해고)의 복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지난 94년 6월 파업으로 32억원의 매출손실을 입었다며,

같은 해 7월 허용대(노조 기획실장)씨 등 조합원 3인과 이들의 입사보증인 4인을 상대로 5억원, 그해 11월엔 박병렬(노조 대의원)씨 등 7명을 상대로 15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 박동학씨 장례 치뤄 가족·대구공전측 합의

지난달 6일 동아리 강제해체 협박에 항의하며 숨진 대구공업전문대(이사장 이경희, 대구공전) 박동학(전자계산학과 92학번)씨의 장례식이 2일 가족장으로 치뤄졌다.

당초 가족들은 박씨가 요구했던 학교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장례당일 학교측과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책위에서도 협상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다.

이에대해 광병인(대책위 관계자)씨는 "가족들은 싸움이 장기화되면서 힘들었을 것"이라고 이해하면서도 "가족과의 협상이 이루어졌다지만 박씨의 뜻은 이루어진 것이 없다. 박씨가 요구하던 동아리문제와 진상규명 등이 명확히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할 것"을 밝혔다. 7일 오후3시 대구공전에서 박동학씨 추모제를 가질 예정이다.

### 15일 전국집회 PCS범국민대책위

정부측이 이달안에 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을 마친다는 방침아래 선정작업

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 주권수호와 개발독점 방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금수, 법대위)는 지난 3일 1차 정보통신 법대위 전국대표회의를 갖고 지역상황과 6월 투쟁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법대위는 6일 오후2시 제2차 전국대표자대표회의를 열고, 보다 구체적인 투쟁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15일 전국집회를 개최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전작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경남등 9개 지역에서 법대위가 꾸려져 서명작업을 진행중이다.

## 김해성목사 석방촉구 한교협 규탄성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출입국관리소와 성남경찰서의 행위를 성역침탈과 선교활동 방해, 선교탄압으로 규정하면서 '김목사의 즉각 석방과 법무부장관의 공식사과 내팔노동자부부에 대한 인도주의적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김해성목사 석방과 외국인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에 참가하며, 13일 오후6시 이를 위한 목요기도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프랑스·독일노조 "직권중재철폐 적극지원" 공노대 대표단, OECD방문

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회의(공노대) 대표단(공동대표 박대주의 4명)이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 OECD와 노조관계자들로부터 한국공노대 투쟁에 대한 적극지원과 연대투쟁을 약속받았다.

지난 27일 출국한 공노대대표단은 28일 파리에서 OECD TUAC(노동조합 자문기구) 관계자들을 만나 '직권중재제도' 철폐와 공무원단결권보장 등을 역설했다. 이에 TUAC 보쉬 사무차장과 관련위원들은 "결사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는 현실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을 결코 중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9, 30일 차례로 공노대대표단을 만난 프랑스 노조연맹과 독일 OTV공공노조는 "직권중재 철폐를 위한 투쟁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공노대 투쟁시 한국정부 및 대사관에 강력한 항의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공노대 대표단은 4일 ILO총회에 국제공공연맹 한국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해 홍보활동을 벌였다.

## 공공부문 노조, 일제히 쟁의발생신고 직권중재철폐·공무원단결권 보장 요구

지난 2일 보라매공원에서 공공부문노조 조합원총회가 열린데 이어, 한국통신·서울지하철공사·조폐공사·부산교통공단 노조등은 4일 오후 노동부에 일제히 쟁의발생신고서를 제출했다. 오는 11일부터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과학기술노조가 7일 쟁의발생신고에 들어가며, 정부출연기관의 4-5개 노조가 쟁의발생신고를 할 예정이다.

보라매 총회를 통해 공공부문노조들은 △해고자 복직 △노조전임촉소방침철폐 △직권중재철폐 △교사·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실질임금보장 △고용불안해소 등을 공동투쟁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공공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없을 경우, 냉각기간이 끝나는 대로 각 사업장에서 공동파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달의 주제-주거권>**  
 주거는 인간답게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인간위원회 입장-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 기무사, "제보자 알려주면 소송취하" 시사뉴스 발행인 연행 "땀땀이 싸우겠다"

기무사비리 보도와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시사뉴스사 발행인 강신환 씨가 5일 오전 11시경 송파서 형사들에 의해 의정부 신곡동에서 연행돼 서울지검(담당검사 한희원)으로 인계됐다.

강발행인은 면회온 직원에게 "진실을 보도한 만큼 내부에서 땀땀하게 싸워나가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사뉴스사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며, 진실규명에 힘쓰겠다"는 입장과 함께 현재 언론탐압색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종원(시사뉴스)차장은 "취재원을 보호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진실을 밝히기가 무척 어려우며, 재판과정도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0년후가 될지라도 기무사의 비리와 언론탐압의 진실은 밝혀져야 하며, 따라서 백서발간 등 진실규명 작업은 무척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무사측에서 시사뉴스사와의 협상을 시도했지만 시사뉴스측이 이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차장에 따르면, 지난 3일 기무사측에서 "해명기사를 쓰거나 제보자를 알려주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지만, '진실'을 협상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취재원을 보호

## 외국인노동자 탄압 규탄 13일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5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는 지난 3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소장 김해성) 난입에 대응키 위해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및 지원 요청에 나섰다. (가칭)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과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탄압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결성식을 갖기로 하고 이에 앞서 7일 낮 12시 명동성당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전국목회자정의평화

실천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등이 3일 발생한 내팔인부부 연행 및 김해성 목사 구속에 대해 '엄연한 선고탄압이며 성소침입'이라며 강력히 맞설 것을 결의하고 나선데 이어, 5일 민변(대표 최영도)과 민가협(회장 권오현),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등도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김해성 목사의 즉각 석방과 치료보장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 사과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해야 하기 때문에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 아시아평화기금 중단 촉구 정대협 일본의원 망원 규탄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는 5일 열린 제219차 수요 시위에서 지난 4일 일본의

원의 망언을 규탄하며, 일본 정부에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대협은 오후 6시 세이브스 의원이 '위안부 모집에 참가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참가한 것이며, 국가와 군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한 망언은 한·일 간 건널 수 없는 깊은 수렁을 파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러한 망언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일본 정부는 국민기금 계획을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행사와동정

-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탄압에 대한 공동대책위 항의집회
  - 일시: 6월 7일(금) 낮 12시
  - 장소: 명동성당 앞
  - 주최: (가칭)외국인노동자 탄압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744-9063)
- 한국교회 인권센터 창립이사회
  - 일시: 6월 7일(금) 오후 2시
  - 장소: 기독교회관(종로 5가) 대강당
  - 주최: 한국교회 인권센터(744-3717)
- 한미행정협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앞 집회
  - 일시: 6월 7일(금) 오후 2시 30분
  - 장소: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앞(대림 엔지니어링 앞)
  - 주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744-1211)
- 96 민중대회
  - 일시: 6월 8일(토) 오후 2시
  - 장소: 건국대학교
  - 주최: 민주주의민중통일전국연합(747-4364)
- 노벨평화상 후보, 웨이씨 석방을 위한 엠네스티 콘서트
  - 일시: 6월 8일(토) 오후 5시
  - 장소: 대구 경북대학교 대강당
  - 주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053-426-2533)
- 6월 민주항쟁 9주년 기념의 밤
  - 일시: 6월 10일(월) 오후 7시
  - 장소: 기독교연합회관 신관 3층 대강당
  - 주최: 계훈제, 고은 등 27명
- 외국인 노동자대책 협의회 후원이 필요합니다.
  -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각 상담소들과 외국인 노동자대표들이 연대하는 단체인 외노협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 계좌번호: 325-06-227109 조흥은행 최정규 문의: 744-9063

## 현중, 쟁의발생 결의 무산 회사측 회유로 대의원들 대부분 불참

지난달 26일부터 단체협상(단협)을 진행중이던 현 대중공업(사장 김정국, 현 중)과 현중노조(위원장 김임식)의 협상이 결렬 위기에 처해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4일 회사측과 협상이 타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노조 집행부가 쟁의발생결의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면서 발생했다.

이날 임시대의원대회에는 전체 대의원 2백21명중 77명만이 참석했고, 노조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회사측의 회유에 의한 것으로 더이상 96년 단협을 진행할 수 없다'며 협상을 중단했다.

박철모(34·노조 편집실 기자)씨는 "항상 임단협때마다 있었던 일로 예전에는 대의원들을 납치해 가두더니 이제는 대의원들을 돈으로 매수했다"며 "이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대의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노동자들의 권리와 실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회사를 대신해 노조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현중노조는 대의원들이 하나로 뭉칠 때까지 산업안전과 후생복지 등 꼭 필요한 업무외에는 전폐하며 조합원 총회를 열어 직접 쟁의발생결의를 할 예정이다.

한편 현중노조원은 총 노동자중 5천여명을 제외한 2만2천여명으로 대규모 단위이다. 대의원은 조합원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되며

조합원 1백명당 1명 비율로 임기는 1년이다.

### 참여연대, 현주사 복직요구 호산콘도 특혜의혹 양심선언

참여연대는 4일 현준회씨 직위해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5월 호산콘도에 대한 감사제개를 선언하는 등 현준회주사의 주장을 재확인하기로 한 시점에서 현주사를 직위해제 상태에 방치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주사는 지난 4월 9일 민변 사무실에서 호산종합개발 콘도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중단에 대해 양심선언을 한 뒤 직위해제 당했다.

### 법민련 씨말리기 강순정씨등 2명 연행

조국통일법민족연합 남측본부 강순정(70·서울시연합부위원장)씨와 정영민(34·법민련 간사)씨가 5일 새벽 3시경 각각 자택에서 강제연행되었으며 압수수색을 당했다. 강씨는 지난해 법민련 간부들의 무더기 구속사태때 대책위를 꾸려 의장직을 맡아 사태해결에 앞장섰다.

5일 현재 두사람의 신변상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6일은 휴일관계로 하루소식이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 <자료>-대법원 결정문

#### "피의자 접견권은 필수적 권리"

지난 3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피의자 접견권은 인권보장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며, "법령의 제한없는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상부의 지시"라는 이유 등으로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 왔으나 이번 판결로 그 불법부당성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건은 지난 2월 28일 정기간행물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이병기씨에게 경찰이 변호인 접견을 불허해 비롯됐다. 변호인들이 서울지법에 준항고를 제출하자 서울지법은 접견처분취소판결을 내렸고, 등대문경찰서는 이에 재항고를 했다가 3일 대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을 받았다(편집자주).

#### 대법원 제2부 결정

사건 96도18 사법경찰관 처분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 재항고인 동대문경찰서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1996.3.11자, 96보2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중략) 재항고이유 제2점을 본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소송에 있어서 적법절차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불구속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까지 접견교통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임으로 달리 해석할 법령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3

대법관:이용훈(재판장)/박만호/박준서(주심)/김형선

### 구독료! 아래 지로로 납부를

성실한 구독료 납부로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인권하루소식>에 힘을 주십시오.

지로번호: 7618848



<이달의 주제-주거권>

주거는 인간답게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 입장-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 불심검문 불응 시민 집단폭행

### 경찰관, 신분·동행장소·목적 등 밝혀야

누구나 한번쯤 불심검문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만큼 수시로 수사기관의 불심검문이 벌어지는데 그만큼 '범죄자 단속·검거' 이유로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위축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불심검문의 기본요건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홍진표(32·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조직국장)씨는 6일 오후 2시 40분경 서울역앞 지하철을 타러 가던 중 의

경으로부터 검문을 받아 주 등등록증 제출을 요구받았다. 홍씨가 근거를 요구하며 거부하자, 근처 서울역 광장에 있는 '자유집' (남대문경찰서 역전파출소 서울역 분소)으로 가져고 해서 따라갔다. 그 안에는 사복형사 6~7명과 의경 2명이 있었고 다시 주민증 제출을 강요해 '법적 근거를 대라'며 홍씨가 그냥 나오려하자, 한 형사가 그의 허리를 잡아끌고 들어가더니

목을 해대며 넘어진 홍씨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얼굴과 가슴을 밟고 뒤에서 목을 졸라댔다. 옆에 있던 동료형사들도 함께 욕을 하고 미는 등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그 뒤 홍씨는 남대문경찰서 형사과에 전치 7일의 진단서를 첨부해 신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홍씨를 폭행한 형사는 신고전화를 거는 사이에 도망치고 이를 목격 한 형사들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신원확인을 하지 못한채 8일 남대문경찰서에 가서 직원사건으로 찾아보기로 한 상태이다.

취재과정에서 남대문경찰서 형사과 한 형사는 "수배 자동 검거를 위해 불심검문은 늘상 있다"고 말했다. "불심검문을 거부해 집단폭행을 당했는데, 불법이 아니라"는 물음에, 부형사라고

밝힌 그는 "폭행을 왜 하겠냐"면서 "만약 폭행을 했다면 그런 '폭행은 불법'임을 인정했다.

홍진표씨 사건에 대해 차병직변호사는 "폭행한 사실만으로 고소가 가능하다. 폭행 경찰의 신분 확인이 안되더라도 관할파출소에 발로 얼굴과 가슴을 밟고 뒤에서 목을 졸라댔다. 옆에 있던 동료형사들도 함께 욕을 하고 미는 등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그 뒤 홍씨는 남대문경찰서 형사과에 전치 7일의 진단서를 첨부해 신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홍씨를 폭행한 형사는 신고전화를 거는 사이에 도망치고 이를 목격 한 형사들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신원확인을 하지 못한채 8일 남대문경찰서에 가서 직원사건으로 찾아보기로 한 상태이다.

한편 홍씨는 사진확인으로 폭행형사를 가려낼 수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불심검문의 문제점에 대해 적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7일자 범민련구속 기사중 강순정씨의 나이를 70세에서 66세로 바로잡습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찰서·지서·파출소·출장소에 동행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당해인은 경찰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④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동행장소·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러금 연락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검사가 증인에게 압력행사

### "그대로 진술 안하면 위증죄로 걸겠다"

7일 오후 2시 서울지법 317호 법정에서 속행된 박충렬(전국연합 사무차장)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두한 장창호(중부지역당 사건으로 영등포교도소 수감중)씨는 "증인내용과 관련, 조성욱검사가 '위증죄로 걸겠다'고 말해 심리적 불안과 고통을 겪었다"고 폭로했다.

장씨는 공판 3일전인 4일 검사실로 불려가 검사실 진술과 재판정 진술이 달라진 점을 추궁받으며, "수사초기 검사실에서 했던 진술 그대로 증언할 것"을 요구 받았다고 한다. 또한, 검사가 "그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위증죄로 걸겠다"고 해 재판정에 출두하는 것조차 두려웠다고 고백했다. 이날 장씨의 증언은 '박씨

가 주사파조직에 가입하고 학습을 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검사는 장씨에게 "박씨가 장씨와 함께 조직에 가입해 학습했음을 증언할 것"을 요구했으나, 장씨는 "주사파조직은 없었으며, 박씨와 학습한 일도 없다"고 증언했다.

장씨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초기에 안기부에서 "박충렬은 간첩이다. 주사파들과 관계는 그냥 지나가는 차원에서 묻는 것이니 확인만 하자"고 했고, 장씨는 이를 몇번씩 확인한 끝에 묻는 말에 의미없이 고개만 끄덕였다고 한다.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된 박충렬씨는 다음 21일 공판에서 구형을 받게 된다.

## 김목사 면담요구 교인 구속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촉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공권력 난입과 김해성(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소장)목사의 구속에 항의하는 집회가 7일 낮 12시 명동성당에서 열렸다.

빛속에 진행된 이날 집회에는 성남, 서울지역 민주단체 회원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연행된 내팔인부부에 대한 인도적 조치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김해성목사와 양혜우사무국장 석방 △성성노안입과 관련된 법무부의 공개 사과 등을 촉구했다.

지난 3일 내팔노동자부부의 연행과정에 항의하던 김해성목사가 구속된 외에도, 6일에는 성남중부서 앞에서 김목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던 성남지역 교인 20여명중 양혜우(31·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사무국장)씨가 사

전구속영장에 의해 공무집행행해 혐의로 구속됐다.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운동 탄압저지와 구속자 석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4시 법무부 항의방문을 진행한 데 이어, 8일 오전 10시엔 서울 목동에 위치한 출입국관리소에도 항의방문을 갈 예정이다. 또한, 13일 오후 4시 기독교회관에서는 제 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식을 갖기로 했다.

### 민족회의, 통일정보 제공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는 10일부터 통일운동 관련 통신 서비스를 시작한다. 자료를 원할 경우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ID를 보내면 된다. 문의 745-5872.

## 경원대 사태, 폭력배 등장

### 위영석 총학생회장 목뼈 부상

학원민주화를 둘러싸고 장기화되고 있는 경원대사태에 신원미상의 젊은 청년들이 개입하고 나서 학생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원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7일 오후 4시경 본관점에 들어가던중 이를 제지하던 직원 50여명 속에 낮은 젊은이들이 나타나 학생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위영석총학생회장이 2m높이에서 밀려 떨어져 목뼈를 다치는 등 다수의 학생이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유현목(부총학생회장)씨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8-10명 정도의 남자들이 똑같은 흰 와이셔츠에 잘 다린 양복바지를 입고 나타나 학생들을

밀어냈다"며, "당치로 보아 선 조직폭력배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직원이라고 자칭했던 이들 젊은이들은, 경찰 순찰차가 학내로 들어오고 학생들이 사진을 찍자 달아났으며, 학생들은 이들 사진을 확보, 직원인지 아닌지 확인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은 지난주중 "학교측이 협상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본관을 점거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이날까지 학교측의 답변이 없자 본관점거를 하려고 한 시점이었다.

목뼈에 부상을 입은 위영석씨는 현재 성남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고 있으나, 아직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한다.

## PCS범대위 무한 농성 정보통신특별법, 국회 청원

「통신주권수호와 개별독점방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금수, 범국민대책위)는 7일 정보통신산업 특별법 제정에 대한 청원서와 그동안 대국민 서명작업을 통해 받은 서명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서 제출에 앞서 범국민대책위 참가자 30여명은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개인휴대통신(PCS) 개별독점과 114 유료화 반대' 1,2차 가두서명운동 결과와 활동결과를 발표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천영세(전국연합 공동대표)씨는 "최대대의 이권사업이라 불리우는 PCS사업자 선정이 초래할 심각성에 대해 국민적 합의와 토의는 커녕 PCS에 대한 국민적 인식조차 전무한 상태에서 요식 절차만으로 발표를 서두르고 있다"며 비난했다. 그는 "통신시장 개방에 따른 일정, 방법, 대책과 신규통신서비스 추진의 원칙, 절차, 소요, 수익 등 영체 등을 특별법으로 규정할 필요를 절실히 느껴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진관(불교인권위 공동대표)스님은 "통신사업은 사람의 심장·혈관과 같다"며 "지금 김영삼정권은 21세기를 앞두고 이러한 심장파 혈관에 치명적 위협을 초래할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직접 서명서를 국회로 가지고 갈 예정이었으나 영등포경찰서 소속 전경과 형사들이 강력한 저지로 한때 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범대위는 4월 17일 노조와 시민·사회운동단체 등 69개 단체가 모여 구성되었으며, 지난달 1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여 총 1백20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또한 7일부터 급속

하게 진행되고 있는 통신사업자 선정작업을 저지하기 위해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 인권침해진상규명등 주력 한국교회 인권센터 출범

한국교회 인권센터(소장 김경남목사, 교회협 인권사회국장)는 7일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창립이사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교회협 별칭기관인 인권센터는 과거 독재정권시대에 희생당한 시민들의 인권·명예회복과 배상, 국내외 인권침해에 적극 대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창립목적에 맞춰 △과거 독재정권의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배상 △국내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법률구조 등의 대책활동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 인권문제에 대한 총체적 연구와 준비 △인권정책개발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

한편 인권센터 이사장에는 박형규목사, 부이사장에는 이돈명변호사와 이명남목사가 각각 선출되었다. 또한 '인권센터 소장은 교회협 인권사회국장이 겸임한다'는 정관규정에 따라 김경남(49)목사가 당연직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인권센터는 이날 토의를 통해 인권단체협의회에 정식 가입키로 했으며,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김해성목사 구속사건에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이로써 그간 교회협 인권위원회의 인권관련 활동은 인권센터에서 더욱 활발히 벌어지게 된다. 또한 인권협 소속단체중 교회협 인권위원회가 자동 사퇴하며, 인권센터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독자투고 715-9185



<이달의 주제-주거권>  
주거는 인간답게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 입장-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매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 '96 임단협 최대현안 해고자복지

### 전해투·공해투 무기한 명동농성 돌입

「민주노총 해고자복지 특별위원회」(위원장 나현균, 전해투)와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복지 투쟁위원회」(위원장 이상춘, 공해투)는 10일 오전11시 명동성당에서 1백50여명의 노동자가 참여한 가운데 올해 임단협의 최대의 현안인 해고자복지를 위한 무기한 농성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나현균위원장은 "정부가 천명한 노사관계 개혁이

란 것이 시간이 갈수록 신뢰성을 잃고 있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노사관계를 개혁하고자 한다면 먼저 정부가 사용자 위치에 있는 공공부문의 해고노동자를 원직복직시키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상춘위원장은 "96년 임단투는 사용자측과의 대화에서 노사관계 개혁이 허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자리일 뿐"이라며 단결된 노동자의 힘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전해투와 공해투는 내일 노사개혁위(위원장 현승중)를 방문해 해고자복지추진문서를 전달하며, 13일 오후7시에는 서울 지하철 노조와 함께 결의대회를 여는 등 해고자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에 따르면 현재 공공부문 해고노동자는 2백42명이며, 지난 93년 복직을 신청한 1천5백여명의 해고노동자 중에서도 아직도 복직되지 않은 노동자는 1천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LG, 해고자 돕던 이웃주민 고소

이동열(37·군포시 산본동 가야APT)씨는 마을 일이 있으면 밤낮으로 받들고 나선다. 주민들은 의아해했다. 도대체 뭐하는 사람일까? 알고보니 해고노동자였다. 이웃주민들은 성실한 이씨의 복지를 돕기로 하고 행동에 나섰다. 회사를 방문하고 집회도 가졌다. 그러자, 이씨와 이웃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경찰의 출두요구서였다. 회사가 이들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이유가 같지 않다. 회사앞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과 웃는 얼굴의 회사마크에 눈물을 찍어 발라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는 것. 이 회사는 '고객을 위한 경영' '정도경영'을 한다는 LG그룹 계열사 LG전선(안양, 군포소재)이었다. 이렇게 해서 LG전선 해고노동자 이동열씨와 이웃주민 윤명래(36)씨등 4명은 어이없이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약칭)시민·노동자연대회의는 LG그룹해고자복지과 주민에 대한 고소 취하를 촉구하는 행동에 돌입했다. 10일엔 오후2시 군포여성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LG전선 안양공장을 방문했다. 회사측은 "취재진이 있으면 방문객을 만날 수 없다"며 면담을 거부했지만, 간단한 집회를 통해 결의를 다지고 14일 LG전선 군포공장에서 대대적으로 열릴 집회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집회를 마치고 명동성당 농성장으로 향하던 이동열씨는 "죽으려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최소한의 삶마저 보장되지 못할 바엔 차라리 그것을 포기하는 게 나은 것"이라며 투쟁의 결의를 표했다.

### 정부, '주거권'인정 제2회 세계주거회의

지난 3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막된 제2회 세계주거회의(HABITAT II)에 참가한 한국 정부대표단 조복한 외무부 심의관 등 10명은 6일 정부대표단 회의에

### 주요 공판 안내

- 6월11일(화) 김태년, 선거부정방지법위반등, 오후4시, 310호속행
  - 6월12일(수) 민병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선고
  - 6월13일(목) 장낙경, 국보법, 오후3시, 단독1부, 424호 신진 전두환의 15인, 반란수괴등, 오전10시, 합의30부, 417호 속행
  - 6월14일(금) 성세경,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속행
  - 허인회, 국보법, 오후2시, 단독9부, 311호 속행
- 이상 서울지법 형사국

서 주거권(Housing Rights)을 구체적 권리로 인정을 하고 범지구적 행동계획에 옮길 것을 확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주거권의 대표적 침해 사례인 강제철거문제와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한국정부가 이후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현재 이스탄불에서 민간단체 활동을 하는 세계주거회의 한국민간위원회(공동대표 권태준등, 민간위원회)는 정부대표단이 주거권을 의제로 채택한 것을 환영하며 이후 국가행동계획의 수립과 실천에 △인간중심의 개발과 지속가능하고 평등하며, 자치적인 도시환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민간단체의 참여 보장과 민주적 의사결정, 투명성 보장등을 요청했다. 또한 조광희변호사는 "우리 정부는 96년 주거권을 명시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약」을 국회 승인을 거쳐 비준을 했지만 무시해 왔다"며 "이번 주거회의를 통해 정부는 주거권을 인정한 것으로 이후 정부의 태도를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스탄불=이정운(민간위), 보충취재=엄주현]

### 정부, 계속단속할 것 의노대 '보호법제정'농성

「외국인노동자 보호법제정 촉구와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비대위)는 10일 외국인노동자의 집「탄압 중지등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진근화(외국인노동자협의회 간사)씨는 "이번 사건으로 보호법제정 서명운동 자체가 어렵게 되었다"며 "현재 외국인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기한 농성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7일 안우만 법무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법무부를 방문했지만 "장관은 바쁘다"는 이유로 출입국심사 과장과 면담을 했다. 면담에 참가한 비대위 관계자에 의하면 심사과장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단속은 계속할 것이고 김해성목사의 문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법적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기술인수생제도도 잘 정착되어 가고 있어 새롭게 보호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 악법철폐, 경제민주화 6월항쟁 9주기 성명

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6·10항쟁 9주기를 맞아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노력할 것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제반 악법을 철폐하고,

민주적 사회개혁을 단행할 것 △재벌중심의 세계화정책을 지양하고, 민족경제의 기반구축과 경제민주화를 단행할 것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구속수사 공평치 않다" 시사뉴스사, 석방촉구

기무사의 비리를 보도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발행인이 고소·구속된 시사뉴스비상대책위(시사뉴스비대위)는 10일 기무사측의 협상제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사뉴스비대위는 발행인의 석방과 불구속 상태에서의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국방부등 정부관계당국에 "기무사의 민간인과 언론탄압의 실상 및 현기무사 지도부의 비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 화력발전소 건설반대 영호도주민 무기한 농성

지난 7일부터 10일 현재까지 「영호도 화력발전소 건설반대투쟁위원회」(수석대표 문병찬, 투쟁위) 소속 주민들은 화력발전소 건설 저지와 구속주민 석방을 위해 인천 답동 가톨릭 회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매일 각 리단위로 15여명의 주민들이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이번 농성은 지난달 9일 문병찬씨등 3명이 인천 중부경찰서로 자진출두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측이 이들을 집시법 및 업무방해로 구속한데 따른 것이다.

우리시대 인권상황판  
<인터넷 인권하루소식>  
한국인권상황을 전세계에 고발합니다  
접속주소 <http://www.hnc.net/~rights/>

### 주간/인/권/호/름 (96년6월3일부터 6월9일까지)

<3일>

한총련 소속 대학생 1백20명 5·18학살자 처벌과 대선 자금공개 요구하며 1-8일 명동단식농성/서울경찰청 제2기동대 이상범(19)일경 영내 기합중지 요구하며 자살, 육군본부에 따르면 91~95년 5년동안 일어난 구타사건은 모두 3천1백46건(구타로 인한 사망사건 26건)으로 연평균 6백29건 기록/제2회 유엔인간주거회의 1백50여개국 대표 1만8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터키 이스탄불에서 14일까지 개최/서울출입국관리소 직원들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소장 김해성)을 방문하던 네팔인 외국인노동자 로전(34)씨부부 체포위해 전경5백명 동원, 김소장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 7일 같은 혐의로 양혜우사무국장 구속/천안문사태 7주년 맞아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내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중국인 수백명 시위

<4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 동대문경찰서장이 변호인 접견불허조치 취소 결정에 불복해 낸 '사법경찰관의 처분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이유없다며 기각/서울시, 서울경찰청·서울교육청·민간단체등과 함께 학교폭력근절지원회의(위원장 조순시장) 구성/경찰청, 임의동행내세운 강제연행과 자의적인 출석요구서 발부에 따른 마찰을 줄이기 위해 개선책 마련해 시행키로/휴가중 부대내 구타근절을 요구하며 투신자살한 이현우(20)일경 사건과 관련해 숨진 이 일경을 구타한 사실이 드러난 제3포병여단 00부대 수송부 김봉호(23)상병 등 4명과 지휘책임이 있는 수송관 손진순(36)준위 구속하기로

<5일>

서울경찰청 보안부 범민련남측본부 강순경(66)서울시연합 부의장과 최진수(33)간사등 2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경찰청 사회주의국가 건설과 국보법 철폐를 위한 이적단체를 결성한 혐의로 나라사랑청년회, 해방노동자 통일전선, 사노맹 영남준비위등 3개 조직 12명 구속

<6일>

불심검문 거부한 홍진표(32)씨 형사들에게 집단폭행당하고 전치1주 상해/중국정부 군대위안부를 둘러싼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을 전쟁미화 기도라고 비난하고 자국 출신 위안부들에 대한 보상요구

<7일>

경원대총학생회 본관점거농성에 들어가던중 폭력배로 보이는 젊은이들과 몸싸움 벌어져 위영석총학생회장 목뼈 부상/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실수로 살인누명을 쓰고 옥살이 한 금아무개(17·재수생)씨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 서울지법에 제기/서울지법 형사23부(전봉진 부장판사)는 사노맹 재건 혐의로 기소된 우회정씨에게 징역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북한대학생들과 팩시밀리 통신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산수산대 전총학생회장 주우열(2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판결 깨고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유3년 선고/한국보훈병원 신경정신과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심포지움에서 한국참전 집단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현재 유형들은 8.8x, 베트남전 참전 집단의 유형들은 23x라고 밝혀



<이달의 주제-주거권>  
주거는 인간답게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 입장-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 교장이 상습적으로 제자 성추행 전교조, 황교장에 대한 처벌과 대책마련 요구

중학교 교장이 학생부로 벌을 받으려 온 3학년 여학생들을 상대로 가슴을 주무르는 등 상습적인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광진구에 위치한 신양중학교 교장 황아무개(55)씨는 지난달 13일 친구와 광주로 가출했다가 돌아온 박아무개양에게 물어볼 것이

있으며 교장실로 불러와 '성관계를 했느냐' '했으면 몇 분을 했느냐' 등 여학생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질문을 하며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양이 쓴 진술서에 의하면 "가출을 했기 때문에 퇴학을 시킬까봐 교장선생님이 이상한 짓을 해도 꼼짝하지 못했다"며 "우리 학교

에서는 나쁜이 아니라 오아무개등 3명이 교장선생님한테 성추행당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16일에는 학교 백인장대회에서 잘못을 해 학생부로 불러온 김아무개양등 3명에게 황교장이 '복장이 왜 이렇게 불량하냐'며 블라우스 단추 사이 틈으로 손가락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이수호)는 1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황교장이 성추행하는 자리에는 교감과 학생부 주임등이 함께 있었다"며 "이는 신양중학교의 성추행이 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은폐되어 온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미 신뢰가 떨어져 있는 현재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지기 전에 교육·여성·인권단체를 중심으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교육개혁차원에서 황교장의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신양중학교 교사들은 11일 긴급 교사회의를 열어 이후 대책마련을 논의

했으며, '아이들에게 사과하는 마음으로 교장선생님의 퇴진을 요구한다'며 서명운동을 벌여 11일 현재 강아무개선생등 22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이다.

### 경원대, 보디가드 고용 대학 씨름부 출신 긴급체용

지난 7일 경원대에 나갔던 청년들의 신원이 밝혀졌다.

총학생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일 폭력에 가담했던 8명의 청년 중 5명이 모 대학 씨름부출신 졸업생인 것을 해당 학교 총학생회를 통해 확인했다고 한다.

이에 학생들은 학교측에 이들의 개입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고, 학교측은 6월1일부로 채용한 직원이 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청년들의 채용경위와 이력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짧은 머리에 건장한 체격을 한 이들 청년들은 7일 학생들의 본관점거저지에 동원된 데 이어, 10일엔 이석규학생처장과 함께 학내를 순시하는 등 경호원 역할을 했다.

한편, 7일 직원들과의 몸싸움과정에서 목을 다친 위영석총학생회장은 현재 김스를 한 상태로 성남병원 511호실에 입원치료중이며, 2주 후에 정밀진단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우리시대 인권상황판  
<인터넷 인권하루소식>

한국인권상황을 전세계에 고발합니다  
접속주소 <http://www.hnc.net/~rights/>

## 고문등 가혹행위...가족등 정신·경제적 피해 커

살인누명을 쓰고 13개월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경찰관 김기웅(31)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최종선고가 오는 25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559호 법정에서 내려진다.

이날 재판결과를 경찰의 불법수사와 가혹행위에 대한 1차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2년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는 형사고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자못 관심을 끌고 있다.

민사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불법행위는 고문과 가혹행위, 가족면회를 미끼로 한 자백유도, 사건수사에 있어서 불성실과 태만, 담당검사의 형식적 수사 등으로 요약된다.

김기웅씨의 진술서에 따르면, 사건첫날 식사도 전혀 주지않고 밤새도록 2-3명이 조를 짜서 번갈아가며 머리를 구타하며 단 1분도 눈을 감지 못하게 잠 안 깨우기고문을 했다고 한다. 또한, 경찰은 "자백서를 써라, 말을 듣지 않으면 시경 특수부 강력계로 넘겨 폭독한 고문을 받게 하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자백하면 가족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회유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가족들도 면회를 갔을 때 경찰이 "아까 자백한 대로 말해, 그렇지 않으면 특수대로 넘겨져 고문을 당할 것이다"며 김씨를 다그쳤다고 증언했다.

### 구타, 잠고문 등 가혹행위

대검찰청 강력부도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강력부가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경찰

은 현장감식을 지연하고 기록자료를 미제출한 것 외에 강요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수사검사가 자백에 대한 심빙성 검토에 미비했고 물증의 추적에도 소홀했음이 문제로 지적됐다.

그러나, 피고측 소송수행자는 일체의 고문과 가혹행위를 부정하고 있으며, 수사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직무상의 불법행위가 아니며,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엇갈리는 양측의 진술이 25일 선고를 통해 1

## 폭행·고문수사관 고소·고발, 2년6개월동안 감감무소식

차적 판단을 받게 되는데 이날 판결이 원고측의 승소, 즉 경찰의 불법수사와 가혹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난다해도 수사관계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될지는 미지수다. 김기웅씨의 수사를 담당했던 김홍일 검사와 12명은 이미 지난 93년 12월 불법감금 및 고문과 폭행,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됐지만 현재까지 검찰은 수사상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지 않지 않다.

### 승소해도 수사관처벌 미지수

재판을 앞둔 김씨는 "우선 민사재판에 승소해서 고생한 가족들에게 위안을 주고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께도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기웅씨는 92년 11월29일 여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구속됐으며 1심에서 징역12년을 선고받고 항소마저 기각당해 끝내 살인자라는 누

명 속에 살아야 할 처지로 몰렸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사건발생 13개월만에 진범이 검거되고 김씨는 93년 12월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그 뒤 94년 4월8일 서울고법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고, 4월14일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 5월11일 경찰서에 복직됐다. 이렇게 해서 어처구니없는 김씨의 고생극은 2년6개월만에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씨가 입은 신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그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도 상당하다. 김씨의 무죄증명에 나서면서 아버지가 직장을 퇴직하고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형제들이 집을 팔았다. 또한, 어머니가 관절염과 목디스크를 앓게 되고 아버지가 간염에 걸리는 등 가족들은 경제적·신체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었다. 이에 김씨 등은 95년 3월 국가를 상대로 5억2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소송대리인인 백승헌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은 원고를 진짜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증거를 짜맞추고 원고를 철저히 깃밟았다"며, "김씨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재발하지 않게끔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가혹행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며, 발생한 피해는 국가에서 당연히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자 투고  
715-9185

## 인권운동 길찾기 청년·학생 연대필요

인권운동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9일 오후3시 진보민중청년연합 청년사업위, 인권운동 대학생연대, 문화정치 유토피안 등 세 단체는 <인권운동 길찾기>라는 주제로 공동심포지움을 열고 각각 인권운동에 대한 문제의식을 소개하며 인권운동의 방향성과 활동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자리에는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사무국장이 참석, 인권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강연하기도 했다.

진보민중청년이라는 세대적 특성에 기인하여 인권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했으며, 대학생연대는 인권과 학생운동의 결합을 위해 다양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유토피안은 철학적 개념으로 부터 인권에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를 나타냈다.

이날 심포지움을 통해 세 단체는 장기적 사업으로서의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인권운동 단체 간의 연대와 네트워크의 마련에 뜻을 같이 했다.

<사무실 이전 안내>  
(주)우리일터기획·월간 <사람과일터>가 6월1일자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새주소:서울시 용산구 청파3동 29번지 4층  
전화:706-8637  
전송:706-8638

구독료! 아래  
지로로...

지로번호  
7618848



<이달의 주제-주거권>  
 주거는 인간답게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 입장-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 학교운영위 선출 민주적으로 부천고 교사, 운영위 조직·선출과정 문제 제기

교육부는 지난 5일, 학교 운영위원 선출과정이 시행령과 조례에서 정한 민주적 대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일 한효석(42·부천고)교사가 교육부에 보낸 질의서 '학교운영위원회(위원회) 조직 및 운영위원 선출'에 대한 답신에서 밝혀진 것이다. 교육부는 부천고등학교의 위원회 선출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미 뽑힌 위원들은 무효라고 말했다.

한교사에 따르면 부천고에서는 전체 학부모에게 한번도 위원회 성격과 구성에 대해 홍보한 적이 없고, 학부모총회를 열어 내정된 학부모위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으며 지역사회 위원역시 선출절차조차 논의한 적이 없는데 이미 내정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 올해부터 마련된 위원회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학부모·교사·지역사회 대표가 학교의 전반 행정에 참여·결정하도록 한 획기적 교육방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즉 운영위는 기존에 학교장 혼자 학교를 꾸려온 관행에서 벗어나, 학부모·교사들이 학교의 일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 학교장은 집행하는 방식으로 변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장들은 학교를 이전처럼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 또한 집회를 마친 50여명의 참가자들은 통신주권 팔아먹는 통신시장 완전개방 연기와 사전 내락설이 나들던 재벌에게 사업권을 준 이석재 장관 사퇴 등을 요구하는 항의문과 1백20만여 명이 서명한 서명용지를 정동부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한편, PCS범대위측은 15일 오후2시 대학로에서 제2차 범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한교사는 "위원회 마련은 학교의 비민주적 요소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다. 그러나 위원들을 교장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둔다면 오히려 비민주적 운영을 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마련해주는 것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로부터 회신을 받은 뒤 한교사는 학교장에게 이를 보였으나 학교장은 "교육부의 회신은 개인에게 보낸 것에 불과하다"며 "상급관청의 지시가 없으면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교사는 일단 한 주를 더 기다렸다가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경기도교육청에 정식 요청을 할 예정이다.

## AI, 법무부 장관에게 항의서한 "인권개선 위한 활동가 구속 이해안돼"

현재 「외국인노동자 보호법제정 촉구와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가 구성되어 10일부터 명동성당에서 무기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제엠네스티(AI)가 김해성(성남 외국인노동자 집 소장)목사와 양혜우(사무국장)씨의 구속에 항의하는 서한을 법무부장관 앞으로 보냈다. AI의 부사무총장 데릭 에반스의 이름으로 보내진 이 서한에서 "엠네스티는 김목사 등 두 사람이 체포된 것이 경찰의 폭력에 의한 것이었다는 보고가 있다"며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AI는 "김목사가 연행된 3일 당시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에 5백명 이상의 전경들이 집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김목사들은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평화적 방법으로 활동했으므로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목사는 지난 3일 불법 체류 노동자 내팔인 부부의 연행을 막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으며, 양씨는 6일 성남중부경찰서에서 김목사의 면회를 요구하다 김목사와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김목사는 지난 3일 불법 체류 노동자 내팔인 부부의 연행을 막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으며, 양씨는 6일 성남중부경찰서에서 김목사의 면회를 요구하다 김목사와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 정동부·LG 앞 시위 통신사업자선정 파문 확산

「정보통신주권수호와 개별독점방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금수등, PCS범대위)는 지난 10일 정부의 PCS등 통신사업자 선정이 발표

## 사노맹, 전원 석방 '사노맹은 외해된 조직'

'사노맹 재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던 민병태(37)씨가 12일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날 민씨가 석방으로 같은 혐의로 2,3월에 걸쳐 구속됐던 12명 전원이 석방된 상태이다. 오전10시 재판에서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판사 조건호등)는 "사노맹 가입은 인정되지만 현재 사노맹은 와해된 조직이며, 피고가 생계에 전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석방한다"며 민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세계의 인권 ③ "사형제도-그러면 정부는 누가 죽이나요?"

### 죽어 마땅한 죄는 무엇인가? 또 누가 죽일 자격을 가졌나?

"이 영화를 만들면서 죽음에 관해 많이 생각해야 했지만 결국에 다다른 물음은 누가 죽을 만한 사람이나가 아니라 누가 죽일 자격을 가졌나였어요. ...내 5살난 아들에게 사형에 대해 설명했더니 그 애가 묻잖아요. '엄마, 그러면 정부는 누가 죽이나요?'"

미국 여배우 수잔 세런던이 미국의 사형제도를 정면으로 다뤘다하여 화제가 된 자신의 영화, <데드맨 워킹>의 개봉을 앞두고, <우저버>지에 털어놓은 소감이다. 나라 사이에 맺은 약속인 여러 인권조약 속에서 '생명권'의

향유는 앞머리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3조(사람은 누구나 생명 및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6조 1항(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다. 아무도 그 생명을 빼앗지 않는다)와 제2선택의정서, 유럽인권조약과 제6선택의정서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생명권'의 보장을 위해 사형제도의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여러차례 표현하였다. 71년과 77년의 유엔총회 결의가 있었고, 82년 유엔인권위원회는 '생명권을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사형제도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논평을 낸 바 있다.

왜 사형은 필요한가? 죄값을 치뤄야 하니까, 본보기가 있어야 하니까, 사회 안전을 위해? 한 번 반대로 물어보자. 죽어 마땅한 죄는 무엇인가? 대부분은 살인죄이지만 각국의 답은 다르다. 중국에선 세금을 속인 죄, 포르노를 제작·배포한 죄,

문화제를 도굴한 죄 등이 적용대상에 든다. 미국은 대통령 암살기도, 스파이, 약물거래 등 비상범죄에 해당하는 60여가지 이상의 범죄를 94년 사형적용가능 죄로 연방법에 추가했다. 파키스탄에선 14살난 소년이 이슬람사원에 낙서를 하여 사형을 선고받았다. 신성모독죄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사형을 통해 얻으려는 주요 이익은 '범죄의 억제'이다.

가 대부분이다. 94년에 처형된 사형수의 88% 이상이 백인을 살해한 혐의였다. 그리고 그 범죄자는 대부분 흑인이다. 가난한자, 인종·민족적 소수자에게 사형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선인전과 실수할 약점을 안고 있는 모든 사법제도의 당연한 결과인지 모른다. 그러나 사형의 경우 심각한 문제는 그 실수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데 있다. 87년 미국에서 행해진 연

## 95년 41개국에서 2천9백31명 사형 사형폐지국 1백개, 존속국 남북한 포함 94개 사형제도는 국가에 의한 또다른 살인행위

작년 11월2일 김기환씨를 비롯한 19명이 처형되었다. 기존과의 죽음으로 우리 사회는 얼마나 안심했는가? 어떤 연구도 사형과 범죄율 간의 상관관계를 밝혀내지 못했다. 가장 최근의 연구조사에는 88년 유엔이 주도한 연구가 결론짓기는 사형이 중신형보다 더 큰 범죄억제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를 찾는데 실패했다. 범죄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다른 예지만, 위협적인 사형이 과연 정치적 동기를 가진 행위를 억제할까?

사형은 정치적 반대자의 영원한 침묵을 위해 제거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된다. 95년 11월10일 나이지리아 정부는 소수민족의 생존을 위한 운동지도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켈 사로 위와와 동료 8명을 처형해 국제적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다. 사형은 자의적이고 차별적이다. 미국에선 살해된 흑인 과 백인의 피해자 수는 거의 같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그 범죄의 피해자가 백인인 경우

가 대부분이다. 94년에 처형된 사형수의 88% 이상이 백인을 살해한 혐의였다. 그리고 그 범죄자는 대부분 흑인이다. 가난한자, 인종·민족적 소수자에게 사형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선인전과 실수할 약점을 안고 있는 모든 사법제도의 당연한 결과인지 모른다. 그러나 사형의 경우 심각한 문제는 그 실수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데 있다. 87년 미국에서 행해진 연

구에 따르면 1900년에서 85년 사이에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3백50명이 결백했다. 그중 얼마나 간발의 차로 처형을 면했지만 23명은 실제로 처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지속, 제도입하려는 정부는 종종 여론투표를 이용한다. 한 예로 일본정부는 94년 11월 사형에 관한 여론투표결과를 발표한 후 12월, 1월에 2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3천명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 투표에서 73.8%가 사형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인권존중은 결코 여론에 의지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사형에 관한 태도는 사실에 관한 지식정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이 사형폐지론의 주장이다.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선 국가가 사형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질수 없기 때문이다. 생명권은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로서 다른 어떠한 법익과의 비교형량을 인정할 수 없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

용하고 있는 방법은 교수형이고, 전기의자, 가스실, 독약투여는 미국에서만 사용한다. 그밖에 총살, 척추신경을 끊어버리는 가로매, 단두대, 공개처형, 그리고 양적으로 질 수 없는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정신적 고통이 사형의 동반자이다. 국제엠네스티의 보고에 따르면 95년에만 적어도 79개국에서 4천1백65명이 사형을 선고받았고, 41개국에서 2천9백31명이 처형되었다. 18세 미만의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어서는 안된다는 국제 인권기준에도 불구하고 미국등

청소년에게 사형을 적용한 나라도 있다. 미국은 가장 많은 수의 청소년 범죄자 처형을 기록하고 있다. 95년 9월 현재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은 1백개국이고, 존속국은 94개이다. 남·북한 정부는 모두 사형을 지속시키고 있다. 사형은 쉽고 빠르다. 이것에 집중하는 한 우리는 진정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사형은 범죄억제를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복잡한 조치로부터 사회의 관심을 돌려놓는 일종의 착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형제도를 재고해야 한다. 인간의 생명권은 고유하고도 존엄한 것이며 어떠한 이유나 경우에도 유보될 수 없다. 사형제도가 지니고 있는 범죄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사형을 시행하는 국가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사형제도는 국가에 의해 자의적이고도 임의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또다른 살인행위일 뿐이다.

사형은 쉽고 빠르다. 이것에 집중하는 한 우리는 진정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사형은 범죄억제를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복잡한 조치로부터 사회의 관심을 돌려놓는 일종의 착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형제도를 재고해야 한다. 인간의 생명권은 고유하고도 존엄한 것이며 어떠한 이유나 경우에도 유보될 수 없다. 사형제도가 지니고 있는 범죄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사형을 시행하는 국가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사형제도는 국가에 의해 자의적이고도 임의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또다른 살인행위일 뿐이다. 【류은숙 인권교육실장】



<이달의 주제-주거권>

주거는 인간답게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 입장-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천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 공휴일에도 16시간 노동, 월급 4만원

### 천안전방 탈출 외국인 산업연수생 증언

최근 외국인노동자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13일 기독교회 관에서는 지난 3일 전남방직 천안공장(천안전방)에서 탈출한 인도인 산업연수생 4명의 기자회견이 마련됐다. 전남방직과 합자 관계에 있는 인도의 TAI전방의 모집 공고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게 된 이들 외국인노동자들은 "한 달에 4만원이라는 최악의 임금조건과 일체의 외출을 허용하지 않는 군대식 통제를 견디다 못해 탈출했다"고 폭로했다.

연수생 샤(Shah, 21)씨에 따르면, 이들의 노동시간은 보통 8-12시간이며, 한국인 노동자들이 쉬는 공휴일에는 무려 16시간씩이나 작업에 투입됐다고 한다. 또한, 지난 3월7일 입국해 천안전방에 들어간 이래 석 달 동안 단 두 차례만 외출을 했으며, 외출시에도 회사관리인이 동행했다고 한다. 샤씨는 "새벽 3시에 자다 말고 일어나 일을 해야 했고 휴식시간에도 청소 등의 잔일 시달렸다. 관리자는 항상 위협적으로 명령했고 말을

듣지 않으면 욕설과 기합을 당해야 했다"며 "연수생으로 왔지만 아무런 교육훈련을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이들은 쉽사리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1년을 계약했기 때문에 지금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엔 1백만원 가량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도, 이들은 천안전방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선 단호하게 "No. Never!"라고 말했다.

아직 천안전방엔 이들 외에도 10명의 인도노동자들이 기숙사에 갇혀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체어를 탄 방글라데시 출신의 외국인노동자 아니스(Anis, 26)씨도 자리를 같이 했다. 지난 1월30일 야근을 마친 뒤 잠자리에 들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을 피하다 2층에서 추락, 양다리가 모두 부러진 그는 변호사의 꿈을 키우던 청년이었다. 그러나, 성치 못한 몸이 1천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마저 짊어질 길이 없어 귀국의 길은 멀기만 하다.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느냐는 물음에 "가슴아파하실 어머니 생각에 도저히 연락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은 한없이 처량하게만 보였다.

30여개 단체 공동위 결성 한편, 이날 오후4시 기독교회관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과 성소납입 및 지원단입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결성식이 열렸다. 각계 30여 단체로 구성된 공동위는 최영도(민변)변호사와 천영세(전국연합)공동의장을 대표로 조직을 구성했다.

공동위는 이후 △법무부 및 노동부 항의방문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입법청원 △명동농성단 지지 및 재정 지원 △각 단체 기관지에서 외국의 외국인노동자 문제 보도 △각계 지도급 인사들의 기자회견 등의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우리시대 인권상황판  
<인터넷 인권하루소식>  
한국인권상황을 전세계에 고발합니다  
접속주소 <http://www.hnc.net/~rights/>

## "연방제는 결국 공산주의하자는 것" 방북학생 항소심서 재판부 강변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최동학) 심리로 지난해 북한을 방문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한총련 소속 정민주(시립인천대 92학번)씨와 이해정(가톨릭대 성심교정 94학번)씨의 항소 1차 공판이 13일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정씨 등은 "한총련에서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은 북한의 고려연방통일방안과는 차이가 있으며 우리의 활동도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방50주년을 맞아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방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학생

들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안은 결국 공산주의를 하자는 것 아니냐"며 "북한민중들이 지독한 공산당들을 만나 고생하는 것을 보라"며 정씨 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씨와 이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국보법상의 고무·찬양 혐의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다음 공판은 7월4일이다.

한편, 이날 재판이 3시간 동안 지연되어 방청을 위해 온 인천·부천지역 학생 50여명이 법원앞마당에서 기다려야 했으며, 경찰의 제지와 몸수색으로 학생중 10명만 방청할 수 있었다.

## <암과 싸우는 농민운동가 최종진>

### 20년 농민운동에 헌신, "계획은 있다"

충북 미원의 한 농촌 마을에 자리잡은 자연건강요양원. 이곳은 지난 4월 26일 폐암진단을 받고 내려온 최종진(47,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조직위원장) 씨가 요양 중인 곳이다.

한달전 이곳을 내려올 때만해도 최종진 씨의 건강상태는 좋지 않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찾아온 사람마다 좋아보여 일단 안심이었다.

불과 1달여전에 그는 폐암진단을 받았다. 93년 12월, 95년 8월, 그리고 올해 4월초 엑스레이 촬영을 했으나 폐렴이나 결핵같은 진단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다 채 한 달도 안돼 갈비뼈 부위의 통증으로 숨을 못쉬게 되어서 다시 병원에 와 엑스레이 재촬영 때야 이상이 발견된다.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것이다.

지금 최종진 씨는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몸만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달 열흘새 몸무게는 9킬로그램이나 빠져 앙상한 팔목과 종아리를 드러내지만 목소리나 얼굴표정에서는 여유와 따스함이 느껴졌다.

#### 하루 종일 풍욕으로 암 치료

이곳에서 그의 하루일과는 새벽4시부터 시작된다. 그가 하는 운동은 풍욕이다. 옷을 벗고 땀바람이 통하는 방 안에서 목안운동, 등배운동, 개구리운동, 봉어운동등을 잠시도 쉬지 않고 30분간 한다. 그리고 나서 30분동안 성경을 읽는다. 말하자면 이것이 휴식인 셈이다. 새벽 5시 다시 30분동안 풍욕을 하고 재빨리 뒷산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고 바람을 쐬다가 내려온다. 다시 풍욕, 30분내 서둘러 산보를 마친다. 이렇게 오전시간에 6차례 운동을 마친다. 오전10시 된장점질, 점심식사 후 된장점질을 하고 오후엔 빨래와 운동으로 시간이 간다. 다시 오후 7, 8, 9시 세 차례 풍욕을 하고 나면 하루일과가 마감된다. 그런 노력이 헛되지 않아 이곳에 와서 목에 혹처럼 붙어있던 인파선도 없어지고, 가래도 없고 기침도 거의 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의 전국농민회총연맹을 있게 한 주역이다. 75년 감리교신학대

학을 졸업한 뒤 76년부터 81년까지 충북 제천으로 내려가 그의 평생의 직업이 된 농민운동을 시작한다. 20년이 지난 지금 죽음의 문전에 간 그가 삶을 시작하기 위해 충북으로 내려간 것은 또하나의 인연인 셈이다.

10년전 농촌학생과 약속 끝내 지켜 그는 대광고를 나왔는데 당시 58년 서울고, 대광고, 숙명여고, 이화여고, 경기여고 이렇게 다섯학교 학생들이 모여 농촌계몽운동의 일환으로 '한빛모임'을 만들었고, 66년 당시 학생회장인 그도 농촌봉사활동을 떠났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어린학생들이 "선생님 이 다음에 저의 마을에 꼭 다시 와주세요"하는 부탁을 듣고 이 아이들과 같이 살아야겠다고 결심한 것이 오늘의 그를 있게한 인연이 되었다. 지금의 부인인 임봉빈(44)씨를 만난 것도 한빛모임을 통해서다.

최종진씨는 3남 1녀 중 둘째이다. 막내동생은 최종철(81년 당시 24세)씨인데 79년 10월 부마항쟁에 앞장섰다가 80년 6월 구속되어 81년 5월 출감한다. 출감한지 4개월도 안된 9월 1일 수배생활과 고문, 징역생활에서 얻은 병마와 싸우다 심장마비로 숨졌다.

81년 전두환정권 당시 "농민운동하면 빨갱이, 기독교농민회는 빨갱이"로 낙인찍힌 때여서 때로 경찰이 집집마다 찾아와 각서를 쓰게하고 공무원이나 친척을 통해 회유를 했기때문에 농민회 조직자체가 불가능할 때였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밤마다 돌아다니며 교육을 했고, 그렇게 해서 81년 3월 12일 면소재지에서 60명이 모여 5시간 동안 총회를 갖는데 그때까지 경찰이 아무도 몰랐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안기부와 보안사의 탄압으로 한달만에 조직이 와해되고 3명만이 남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반 만에 그 3명이 더 큰 군단위 3개에 농민회를 조직하는 승리를 거두었다.

85년 7월은 농민들의 대중적 소몰이 싸움으로 농민운동사상 기억되는 해이다. 그해 4월 22일 전두환 대통령의 방미기간에 맞춰 오후6시 60여명의 농민들이 세종문화회관에서 16차

선을 가로질러 미대사관을 향해 뛰어가다가 30명이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다시 바로 이튿날 아침 8시 프래카드와 유인물을 든 농민들은 미대사관 옆 교보빌딩에서 있다가 출근버스가 들어가기 위해 대사관문을 여는 순간 미대사관 마당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다. 그 사건으로 목이 잘린 사람은 어처구니없게도 종로경찰서 경비대장이다. 당시 농민의 시위를 막기위해 종로서 경찰들은 미대사관 담을 넘어와 시위를 해산하는데 경비대장은 치외법권 지역을 침입한 이유로 적위해제당한다. 이 사건은 청와대와 외교적 문제로 까지 확대되고 농민들은 전원이 풀려나 대전까지 호위를 받으며 내려왔다고 한다. 이 싸움은 농민운동사에 남을 커다란 성과를 거두는데 이를 계기로 농민투쟁은 생존권의 경제싸움에서 정치투쟁으로 변화되는 전환점을 마련한다. 그 뒤 그는 기독교농민회 사무국장을 지내고, 89년에는 전민련 조직국장 겸 사무차장으로 활동한다. 같은해 우리농축산물자기 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 제1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연대사업국장을 지내며 91년에는 국민연합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다 강경대대책위 상황실장으로 맡았다가 투옥되어 1년6개월의 옥고를 치르고 93년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조직위원장을 맡는다. 93년 제4기 전농 사무처장, 제5기 사무처장등을 지냈다.

#### 지금은 건강회복에 전력

그는 농민과 속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다. 그는 농민운동은 무엇보다도 "운동가의 삶이 농민들에게 보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기다렸다가 가꾸는 그런 농심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 농민운동은 농민에 대한 사랑과 땅에 대한 사랑이 기본이다. 여기에 끈기와 인내를 필요로 한다.

끝으로 완쾌된 이후에 계획하고 있는 바에 대해 물음을 던졌다. 그는 "하고픈 일에 대한 계획은 있지만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는데 전력할 생각이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계획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말을 하면서 어느새 그의 얼굴이 불그레해졌다. 그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일이라고 했다. 바로 지금 그는 자신과의 한판승부를 벌이고 있다.



<이달의 주제-주거권>

주거는 인간답게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 입장-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문체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작 못해  
푸른영상 대표 긴급구속, 편집기자재등 압수

<어머니의 보랏빛 수건> 등을 제작한 독립영화단체 푸른영상 대표가 긴급구속되고, 관련 비디오물 9백80점도 경찰에 압수됐다.

노랑진경찰서는 14일 오전 신대방동에 위치한 푸른영상 사무실을 수색, 비디오 테이프 9백80점 등을 압수해 간대 이어, 오후 3시반경 김동원 대표를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령(음비법) 위반으로 긴급구속했다. 또한, 오후 5시경 형사 3명이 의경 8-9명과 함께 다시 사무실을 수색해 촬영 및 편집기자재 일체를 압수해 갔다. 경찰은 이날 긴급구속과 압수수색의 이유를 "문체부에 등록하지 않고 비디오를 제작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음반 사전검열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창작의 자유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구속 및 압수조치는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음비법 제2조는 문체부에 등록해야 하는 제작업자를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푸른영상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기중변호사는 "푸른영상은 '업'으로 비디오물을 제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체부 등록의무가 없다. 또한 판매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실비보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등록의무가 없는 제작단체라는 점과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는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른영상도 "이번 사건은 불법비디오 규제라는 명목으로 영상단체의 활동을 탄압하고 자율적인 창작의지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번 사태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푸른영상에 대한 압수수색과 대표의 긴급구속엔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되고 있다. 첫째, "비디오의 내용을 문제삼을 뜻은 없다"고 경찰은 밝혔지만 오전의 압수수색시 담당 형사들인 소년계 형사들 외에 대공과 형사 2명이 사무실에 나타난 사실이다. 둘째, 소년계장이 "별로 중대한 사건이 아니므로 저녁 6시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 때까지 출두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니 그런 일은 서로가 피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말했지만 그뒤 채 한시간도 지나지 않아 김 대표를 사전구속영장을 통해 전격 구속한 점이다.

91년부터 활동해온 푸른영상은 중요한 사회사건들의 기록을 영상으로 제작해

오던 영상동호단체로서 철거민·인권·통일·노동자·장애인 등의 문제를 주요 주제로 다뤘었다. 이들의 주요작품으로는 <어머니의 보랏빛 수건> <상계동 올림픽>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1> 등이 있다.

정부의 이중적태도 비판  
해고자 복직촉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4일 구속노동자 석방과 해고노동자 복직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일부 보수 언론은 민주노총 계열노조의 연대파업 위험성을 극대화시키며 노골적으로 강경진압방향을 앞장서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정부는 말로는 노사화합과 협력을 역설하며 노동자들에게는 탄압으로 일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구독신청/기사제보  
715-9185

우리시대 인권상황판  
<인터넷 인권하루소식>  
한국인권상황을 전세계에 고발합니다  
접속주소 http://www.hnc.net/~rights/

김해성목사 석방하라  
재독교민 7단체

계독양심수후원회·재미한국여성모임·한독문화협회 등 7개 계독 교민단체는 11일 김영삼 대통령앞으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와 성남의국인노동자의 집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또한 김해성목사와 양혜우사무국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 취업을 위해 독일망으로 건너간 교민들로 얼마전부터 국내 노동시장에 산업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온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외국인노동자들'에 관심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도상국을 벗어나 중진국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한국에서 어떻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수치심으로 차마 일갈을 들 수 없다고 호소했다.

덧붙여 이러한 정부의 처사는 독일에 진출한 삼성동 해외진출기업의 이미지와 결코 분리되어 인식되지 않는 점을 명심할 것을 경고했다. 더불어 정부의 개선대책안이 빠른 시일안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국제여론을 동원해 한국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전세계에 호소할 것임을 밝혔다.

검찰, 영터리 구속영장으로 구속

시사뉴스 발행인 전과18범으로 허위기재

시사뉴스 발행인 강신한 씨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이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기재되었음이 밝혀졌다.

지난 4월 30일 서울지검 형사2부 한희원 검사가 법원에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은 "강 씨가 전과 18범이며, 시사뉴스는 기무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게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판사로서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강 씨의 전과사실은 시경 컴퓨터 기록상에도 없는 것으로 모 언론사가 자가 확인해 주었다. 다만 향군법위반, 과태료 등이 강 씨의 위법사례인 것으로 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씨의 구속영장은 "피의자에 산업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온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외국인노동자들'에 관심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도상국을 벗어나 중진국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한국에서 어떻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수치심으로 차마 일갈을 들 수 없다고 호소했다.

최 전력 18범'인 자로..."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있어 강 씨를 상습적 범죄자로 몰고 있으며, "지난 77호의 기사가 허위사실을 게재했다"고 기록해 시사뉴스사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종원(시사뉴스) 차장은 "벌금 3백만원의 사건은 무주리조트 비리를 취재하던 과정에서 의압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사에서 조사를 받을 때 '77호 기사의 진위여부를 확인했다'고 문자 한 회원 검사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에서 계속 조사에 응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허위영장을 쓰는 검사에겐 수사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강신한 씨는 이렇게 발부된 사전구속영장에 의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5일 구속됐다.

해고자복직·민주적 노사개혁 요구

권영길위원장 등 명동성당 14일 농성돌입

임단협 최대의 쟁점이 해고자복직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들이 명동성당 농성에 돌입했다.

14일 오후 2시 열린 '96 임단투 승리와 민주적 노사개혁 쟁취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집회' 돌입식에서 권 위원장은 "민주노총 지도부들이 해고자복직 등 노동자의 요구를 해결하고 현재의 위기국면을 극복하고자 농성을 시작한다"며 "우리의 농성은 사태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오늘 오전 11시와 17일 오후 1시

에 광화문 동화빌딩 앞에서 해고자복직촉구 집회를 열며, 18일에는 명동성당에서 임단투 상황 및 노사관계 개혁에 관한 최종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23일 한국통신노조가 보낸 해고효력에 대한 질의서에서 '회사로부터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해고된 자가 형사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근로자의 지위는 상실된다'고 밝혀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 조합원자격을 인정해 온 현행 노동조합법을 전면으로 무시한 발언을 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인권간행물

- 「민족예술」 6월호-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743-5872)
  - 주요내용:작업의 현장에서 생각해보는 '굿'의 의미/오늘의 시집에서 되돌아보는 6월항쟁/주거와 주택문제등 100쪽.
- 「고난함께」 제45호 -고난모임(393-4662)
  - 주요내용: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석방, 사상전향제 종식권고/안기부직언, 그랜 어쩔수 없었으니 이해해 달라, 미안하다!/출소장기수 이두균선생님을 찾아서 등 42쪽.
- 「신문로 포럼」 통권32호-신문로 포럼(733-0969)
  - 주요내용: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재검토하라/세계경제 환경변화와 소비자 주권의 정립/정부예산 0.4%로 청소년 문제 해결될 수 없다/더 이상 복지의 관점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등 45쪽.
- 「여성의 눈으로」 5·6월호-여성의 전화(269-2962)
  - 주요내용:장애인은 일하고 싶다/아동학대, 또 하나의 외면된 폭력/아동보호 시설을 통해 본 아동학대의 실태/한국여성의 전화 성폭력추방운동사/더 이상 미룰수 없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등 56쪽.
- 「우리네 아이들」 6월호-지탁연(275-8505)
  - 주요내용:영아보육 활성화방안 세미나에 다녀와서/영유아 관찰과 교사의 연구일기를 통한 자기 성찰에 대하여/장애유아를 위한 케롤라이나 교육과정/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서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서 등 71쪽.
- 「노동사회연구」 제7호-한국노동사회연구소(778-4225)
  - 주요내용:노사관계 '개혁'과 노동운동/미국의 노사관계 개혁과 단결위원회/공기업 노사관계의 쟁점과 전망/서울 지하철노조의 사회개혁투쟁/임금불평등 해소를 위한 영국 노조의 활동/덴마크노조의 교육체계/독일의 산별적 임금체계 등 131쪽.
- 「한울노동법감찰」 15호-한울노동문제연구소(593-6501)
  - 주요내용:근로시간 적용의 예외/통상근로와 같은 속직근로, 야간연장수당 주어야/속직근로중 실제업무시간만 수당주면 돼/사용자 지휘감독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자유이용 보장된 대기시간만이 휴게시간/일속직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등 70쪽.
- 「이stanbul 가는 길」(세계주거회의 안내)-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3673-3031~3)
  - 주요내용:세계주거회의의 민간단체와 지역주민단체를 위한 안내/세계주거회의가 이뤄지기까지/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 현황/이stanbul회의의 준비안등 109쪽.
- 「제8차 총회보고서」-민가협양심수후원회(763-2606)
  - 주요내용:양심수 현황/감옥의 인권실태 보고서/양심수 명단/출소 장기수 종합검진보고서/무연고 출소장기수 주소록/양심수후원회 회칙/구체소:교도소 주소록 등 68쪽.
- 「안전한 어린이, 건강한 서울」-성폭력상담소(576-7128)
  - 주요내용:어린이 성폭력 실태/어린이 성폭력의 예방 및 대책, 정신의학적·사회문화적·법제도적 측면에서 등 81쪽.
- 「전교조 합법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전교조(967-3976)
  - 주요내용:전교조가 합법화 되어야 할 여섯 가지 이유/국제적 지지/국내 여론/공개 질의서/전교조 현황과 활동 내용 등 53쪽.
- 「노사관계 개혁방향」-민주노총(765-2010)
  - 주요내용:신노사관계 구상 요약과 평가/민주적 노사관계 확립의 기본방향/노사관계의 재편과 민주노조운동의 진로/작업장 노사관계 개혁의 과제/노사관계개혁을 위한 노동법 개정방향 등 63쪽.



<이달의 주제-주거권>

국민의 국가에 대한 주거안정 요구는 하나의 권리이다  
-2천년 주거를 위한 지구전략  
내용 중-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 교장퇴진, 학생인권보호 앞장 신양중공대위 결성, 교육·여성·인권단체 참여

「신양중 성추행교장퇴진 및 학생인권수호 공동대책위」(신양중 공대위)가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성동광진 민주단체협의회·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인권운동사랑방 등 13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15일 구성되었다. 신양중 공대위는 15일 오전 10시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에서 1차 회의를 갖고 공동대표에 김경애(피해학생 학부모 대표)씨와 이수호(교육단체 대표)씨 등을 선임했다(인권

여성단체 대표 교섭중). 신양중 공대위는 이후 △ 피해 학생 학부모 재판대응 투쟁 △신양중 교장퇴진을 위한 항의방문 및 서명작업 △교장퇴진을 통해 접수되는 피해학생들의 제보를 진중 조사해 학생인권침해사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할 것 등을 결정했다. 또한 오는 19일 오후3시 신양중교장 퇴진을 위한 신양중학교 앞 항의방문과 성동교육청 항의방문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는 피해 학생 학부모 김경애씨 등 4명이 참석해 교장 및 교육부측의 태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어떠한 회유가 있어도 교장을 퇴진시킬 것임을 밝혔다. 한편 신양중 교장 성추행사건은 18일 MBC-TV PD수첩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연락 및 고발 전화: 966-6364 전송: 968-3979).

### 박순금 장로 운명 윤금이공대위등 활동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공동대표 박순금(74)장로가 14일 오후4시15분 자택에서 운명했다. 고인은 가장 여신도회 전국연합회장, 한국교회여성연합회장, 정대협 공동대표, 92년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공대위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해 왔다. 박장로는 지난 3월20일 뇌출혈로 쓰러진 뒤 아주대 병원에서 뇌수술 등의 치료를 해왔으며, 시신은 고인의 뜻에 따라 의학발전을 위해 지난 15일 아주대병원에서 기증했다.

### 김창한 해고노동자 5회 불교인권상 수상

올해로 5회 맞는 불교인권상 수상자로 철도 민주화를 위해 힘써온 해고노동자 김창한(45·전 철도 특별단 재교섭 추진위원장) 씨가 선정됐다. 김창한 씨는 88년 7월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해고 당했으며, 94년 전기협·전지협 파업에 개입한 이유로 재차 구속된 바 있다. 17일 오후 조계사에서 수상식이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김 씨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살라는 체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 북한수재민돕기 성금 의료인, 유니세프 통해

오늘 오전 10시 북한수재민돕기 보건의료인 모금본부(모금본부, 본부장 임종철)는 지난 4월~5월말까지 1차로 모금한 금액 1천6백만원을 국제연합아동기금(유니세프)을 통해 전달한다. 모금본부는 성금을 유니세프에 전달한 이유에 대해 "대한적십자사를 통하게 되면 식량이나 의약품이 아닌 담요나 양말, 식용유 등으로 전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 밝혔다.

### 구독료! 아래 지로로 납부를

성실한 구독료 납부로 만능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인권하루소식>에 힘을 주십시오.

지로번호: 7618848

## 산업연수생제도 폐지해야 야태회의, 외국인노동자 문제 논의

지난 15일 오전 10시 스위스 워싱턴호텔에서는 「외국인의 관점에서 본 한국 민주주의 및 인권」이라는 주제로 야태민주지도자회의가 열린 가운데, 최근 중대한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외국인의 시각에서 살핀 한국사회」라는 주제로 오전 회의가 진행된 데 이어, 오후부터 시작된 2차 회의는 「한국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문제점」과 「외국인노동자 인권」에 대한 주제 발표 및 질의답변으로 이어졌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수근(경희대) 교수는 "날로 심각해지는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산업연수생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산업연수생제도를 합법적인 고용계약을 통한 외국인노동자 공식초청제도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채용외국인의 입장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하산(Sardar Hasan, 방글라데시 공동체모임 회장) 씨도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와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요구하며, "외국인노동자들도 한국인들과 같이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엔 외국인노동자와 인권문제를 주제로 김해성(성남 외국인노동자 집 소장) 목사의 발표가 있

을 예정이었으나 김 목사가 구속된 관계로 김태경(34·김 목사와 함께 구속된 양혜우 사무국장 남편) 씨가 발제문을 대독했다.

### 국가기밀 범위모호 박창희교수 상고 기각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만호)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창희(64·한국외대)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6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국가기밀누설·반국가단체지령수수·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국가기밀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자료"라며,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널리 알려진 사항이라든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고 해석했다.

### 민변, 해고자 복직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17일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정부에 △공기업 해고자복직 불가방침 수정 △공공력 투입계획 철회 △해고자복직 등을 촉구했다.

### 우리시대 인권상황판

<인터넷 인권하루소식>

한국인권상황을 전세계에 고발합니다

접속주소 <http://www.hnc.net/~rights/>

## 주간/인/권/호/름

(96년6월10일부터 6월16일까지)

<10일>

민주노동당 해고자 복직을 위한 무기한 명동농성 돌입/서울 광진구 신양중학교 황아무개(55) 교장 여중생 성추행, 고사들 퇴진운동 전개함. 13일 피해학생부모 등 부지침에 성추행혐의로 고소/화력발전소 건설반대, 구속자 석방 요구하며 영종도주민 무기한 농성/경관폭행 혐의로 조사 받던 방두석(36)씨 폭행사실을 부인한 유서 남기고 자살/국제노동기구(ILO)는 전세계 10~14살 어린이의 13%인 약 7천3백만명이 노동시장에 내몰리고 있다고 보고/유엔 세계주거회의에서 주거권의 '독자 인권' 선언이 미국 등의 반대로 무산/10,1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럽연합 주최로 '여성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회의' 개최

<12일>

대법원 형사 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 여성으로 성진환한 김아무개(36)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28)씨에 대한 강간혐의 기각, 강제추행치상죄 적용/PCS 범대위 LG빌딩 앞서 정동부와 재벌독점 규탄하는 집회개최/국제연합네스티 법무부 장관에 김해성 목사와 양혜우씨 구속 항의서한 보내

<13일>

부산지법 형사 6단독(배광국 판사),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 피의자를 고문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경찰서 허금진(38) 경장등 3명 선고공판에서 허씨에게 독직폭행죄를 적용해 징역 1년,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과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탄압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발족/나눔배 부총리, 중소기업체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도입 확대를 적극 추진키로/대검 공안부(부장 최병국) 제3차 개입, 연대파업, 준법투쟁 등 불법노동쟁의 엄중 단속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일본 '신록동회' 소속 참의원 의원 26명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 조사회'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법안 국회제출

<14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 푸른영상 압수 수색, 15개 작품 1천여개 압수당하고 대표 김동원(41)씨 긴급구속/서울지검 공안2부 노동쟁의조정법(제3차 개입 금지)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민주노동권영길(53)위원장에 대해 보석취소 청구키로

<15일>

유엔 제2차 주거회의, 이스탄불 선언 및 의제를 채택하고 폐막/문화방송 강성구사장 사퇴

### <해설>

지난 한 주간은 노동계, 교육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억눌린 외침들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과거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 전해투의 농성에 맞서 불법노동쟁의를 엄중 단속하겠다고 대검 공안부가 나서는가 하면, 서울지검은 권영길 위원장의 보석허가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다. 또 노동부가 현행 노동조합법을 뒤집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공대위가 외국인노동자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나선데, 반해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조금이라도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달의 주제-주거권>  
국민의 국가에 대한 주거안정  
요구는 하나의 권리이다  
-2천년 주거를 위한 지구전략  
내용 중-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 협이는 음비법, 조사는 국보법 푸른영상대표 불구속 수사, 기자제압수로 제작중단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위반(음비법) 혐의로  
긴급구속된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음비법위반보다는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사항  
을 집중조사 받은 것이 드  
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지난 14일 음비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된 뒤  
16일 새벽2시경 영장기각으  
로 풀려난 김동원(41·푸른

영상 대표)씨에 의해 확인  
된 것이다. 또한 구속 당시  
김씨의 변호인인 김기중 변  
호사가 서울지법에 '영장청  
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한 점등이 이번 영장기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이후 불구속상  
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의견서 2면 게재>  
김 씨에 따르면 연행된 뒤

노량진경찰서에서 2시간 가  
량 음비법에 대한 조사를  
받았으며, 다시 4층 보안과  
에서 20시간 가량 국보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긴급구속장  
이 공안2부 소속 이용훈검  
사 명의로 발부된 점이나,  
조사를 받기전 이미 푸른영  
상 작품에 대한 공간감정평  
가서가 작성된 점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김  
씨는 "평가서에서 '반정부  
적 성향은 있으나 반체제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지은  
점으로 짐작해 볼 때, 국보  
법 위반 신청은 못하고 음  
비법을 걸고 나선 듯하다"  
고 말했다. 보안과에서는  
푸른영상의 작품에서도 특  
히 문익환 목사에 관한  
다큐멘터리 <하나가 되는  
것은 더욱 커지는 일이다>,  
민가협어머니들을 다룬  
<어머니의 보랏빛 수건>  
등 작품의 '용공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더욱이 보안과측의 주장을  
김씨의 답변인양 조서에 쓰  
려고해 6시간이상 공방을  
벌였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김씨는  
"음비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영상의 경우 해당  
하지 않는다. 음반비디오물  
을 단속하기 위한 음비법을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실상은 국가보안법 위반혐  
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푸른영상은 압수수색 과정  
에서 1천여편의 작품이 압  
수된 것 외에도 편집기자제  
를 압수당해 현재 제작이  
중단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 반환을 위해 푸른영상  
측은 압수물품에 대한 가안  
보신증을 제출키로 했다<6  
월15일자 하루소식 참조>.

### "노사개혁위 참여문제 고려하겠다" 민주노총소속 노조, 20일 연대파업 결의

20일 공공부문 노조가 일  
제히 파업 강행을 선언하고  
나선대 대해 정부측이 공권  
력투입을 거론하는 등 올해  
의 입단협이 긴박하게 전개  
되는 현 상황에서 전국민주  
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  
길, 민주노총) 소속 노조위  
원장들은 18일 오후1시 명  
동성당에서 '평화적인 교섭  
을 위해 정부와 기업주들에  
게 보내는 마지막 요구'라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해고자 복직,  
전임자 축소 철회, 임금가  
이드라인 철폐 등을 촉구하  
며 노사개혁을 진정으로 원  
한다면 해고자 복직문제 해  
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  
했다. 또한 노동부측이 계  
속 제3차개입금지조항의 엄  
격 적용과 공권력 투입 등  
을 운운하며 노사관계 개혁  
에 역행하는 행정조치를 하

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덧붙여 공공부문 사업장에  
대해 직권중재와 공권력 개  
입 금지를 요구하며 '노사  
자율교섭' 보장을 촉구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권력 투입등으로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 간다면 20일  
강력한 연대파업을 벌이며,  
22일 전국 동시다발로 대규  
모집회를 열어 대정부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경고  
했다. 그리고 공권력 투입  
즉시 비상중앙위원회를 개  
최해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의 참여문제에 대한 중대한 결  
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8일 열린 권위원장  
의 재판은 검찰측의 요청으  
로 7월9일로 연기되었으며,  
검찰측의 권위원장 재구속  
고려 발언에 대해 권위원장은  
"대응할 가치도 없는 발  
언"이라고 일축했다.

### "광주와 무관하다" 전두환씨 발언 항의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  
합(상임의장 이창복)은 12  
·12·5·18 공판과정 전두  
환씨의 광주개입 부인발언  
에 대해 이는 "광주의 원혼  
을 두 번 죽이는 것이며 광  
주시민과 유가족들을 우롱  
하는 몰염치한 작태"라고  
규탄했다. 또한 전국연합은  
"반성할 줄 모르는 전두환  
과 그 무리들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 ○ 주요 공판 안내 ○

- 6월19일(수) 정병득의2인, 업무방해, 오전10시, 단독3부, 317호 선고
  - 6월21일(금) 박충렬, 국보법, 오후2시, 단독9부, 317호 속행
  - 양규현, 일반교통방해등, 오후2시, 단독4부, 421호 속행
  - 성세경,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속행
  - 정미은,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선고
- 이상 서울지법 형사국

### <자료>-영장청구에 대한 의견

####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 1. 사건의 경과와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가. (중략)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 제25조 제1호(등록을 하지 않고 비디오물을 제작한자), 제3호(심의의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판매, 배포, 대여 또는 시청제공한 경우)를 위반하였다는 것과 같은 법 제26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디오물을 판매, 배포, 대여 또는 시청제공한 자)를 위반하였다는 혐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 2. 음비법 제25조 제1호와 제26조 위반에 대하여

가. 음비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 비디오물제작업자란 '비디오물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업으로 하는 자'라 함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경우를 '업'에 관하여 대법원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 하지만 피의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하지는 않았습니. 따라서 음비법 제4조 소정의 등록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대표로 있는 푸른영상은 회원제로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회원들에게만 배부됩니다(중략). 다만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찾아오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히 요청하는 사람이나 단체에게는 무료로 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실비보전의 차원에서 일정한 비용을 받고 요청하는 작품을 배부하기는 하나 이러한 경우는 오히려 예외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푸른영상이 영리를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푸른영상은 1편의 작품을 촬영하게 되면 1백개 내지 2백개 정도를 비디오물로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부해 왔습니. 이미 압수된 장부에도 나타나듯이 회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배부되는 비디오물은 적게는 10개, 많게는 50개 정도를 일정한 비용을 받고 넘겼다고하여 이를 판매목적으로 제작하였다거나 업으로 비디오물을 제작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라. 더욱 문제인 것은 음비법이 비디오물 제작업자에게 엄격한 시설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음비법 시행령 제4조). 이러한 시설요건은 어쩌보면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인데, 왜냐하면 영상물 제작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음비법이 요구하는 정구의 녹음실, 제작실, 녹화실 등을 갖추지 않더라도 비디오물뿐만 아니라 영화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비디오물제작업자로서의 충분한 요건(즉 부실하지 않는 비디오물을 제작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기준 때문에 등록을 신청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마. 실사 피의자가 일정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작품 1편당 1백개 내지 2백개 수량의 비디오물을 제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회적 영향력이 미미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지 않기 때문에 구속까지하여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음비법이 원래의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음란 포르노물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비법이 엄격한 시설기준을 요구하고 등록을 요구하는 이유는 비디오

물이 곧 포르노물이었던 시절에 이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기술의 발달과 비디오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포르노물외의 건전한 비디오물이 많이 제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률을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임무인 만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 3. 음비법 제25조 제3호 위반에 대하여

가. 음비법에 의하면 비디오물은 반드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표현의 한 형식인 비디오물을 사전에 검열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 출판에 대한 사전검열금지규정에 위반되는 무효임이 분명합니다.

나. 음비법의 규정과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두고 있는 영화법 제12조 제1항(영화는 상영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항(심의를 받지 아니한 영화는 상영하지 못한다)과 그 처벌규정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사전검열을 금지한 헌법 제21조 제2항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2조 제1항, 그리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정신청을 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입니다.

다. 비디오물도 영화와 마찬가지로 사상, 양심 및 지식, 경험 등을 표현하는 수단인 하나로서 넓은 의미의 언론, 출판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디오물을 문화체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정기적인 성격이 강한 공연윤리위원회에서 사전에 배포해도 되는 것인지 여부를 심의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이므로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제에 법원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자 이번에 개정된 음비법에서 음반부분만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라.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더 충분한 논의할 사항이 있으나 일단 공연윤리위원회의 성격과 심의를 하는 내용에 비추어 이는 사전검열이며, 비디오물이 표현의 한 형식이라는 점만으로도 피의자에게 적용된 위 규정에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만을 우선 지적하고자 합니다.

##### 4. 음비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가. 지난 4월경 입법예고된 음비법 시행령에 의하면 등록예외대상으로 '기획제작을 업으로 하는 경우'와 '공중에 판매, 배포, 대여 또는 시청제공을 목적으로 제작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시행령에 의하면 푸른영상의 경우 위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푸른영상의 경우 (중략) 회원용 또는 회원들의 영상물제작능력배양차원에서 비디오물을 제작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비디오물 심의에 대하여도 예외규정을 추가하였는데, 교육, 학습, 종교 또는 산업, 업무 등에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푸른영상의 경우 판매목적보다는 교육목적에 의하여 비디오물을 제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시행령이 공포될 때까지만이라도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연기하여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중략) 96.6.14 피의자의 변호인 변호사 김기중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이달의 주제-주거권>  
국민의 국가에 대한 주거안정  
요구는 하나의 권리이다.  
-2천년 주거를 위한 지구전략 내용 중-

# 인권하루소식

## 언론, 만도 파업 쟁점흐리기

### 회사 단체협상 위배, 노조 파업 불러

18일 만도기계(사장 오상수)의 파업에 대해 각 언론사는 일관된 보도양상을 보였다. 이날 각 방송사를 비롯한 언론의 보도는 파업의 배경과 쟁점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제쳐두고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 등에만 초점을 맞추으로써 '노조가 잘못하고 있다'는 인상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것이다. 만도기계의 파업은 노조측이 보충협약을 제기하자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비롯됐으며, 여기엔 회사가 '신경영전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 95년 1월 노사 양측은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인사제도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합의·추진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할 때는 일체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협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회

사측은 노조측과 협의없이 신경영전락을 추진함으로써 노조측의 반발을 불러왔다. 노조측에 따르면, 최근 회사가 신경영전락이라는 명목하에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회사는 단체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노령 또는 고수당 노동자들의 보직을 박탈하고 이들의 자연 사직을 유도함에 따라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으며, 새로운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공정간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작업자에 대한 감시를 통해 근무실적에 의한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등 일방적으로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회사측의 취약사 위배를 지적하며 보충협약을 제기했지만, 회사측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18일 전면파업이 발생했다는 것이 노조측의 설명이다. 현재 노조측은 '고용안전보장위원회'의 설치를 최대 쟁점으로 삼고 있어, 협상의 추이에 따라 파업의 지속여부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신양중 학생들 "성추행교장 퇴진" 한 목소리 공대위, 신양중·시교육청 항의방문

「신양중학교 성추행교장퇴진 및 학생인권수호 공동대책위」(공대위)는 19일 오후 3시 신양중학교를 방문, 황수연 교장의 퇴진과 학원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따라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수업을 마치고 학교 주변에 모여 있던 학생들은 찾아온 외부인들에게 자신들의 견해와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려는 데는 주저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진술서요? 그거 교장하고 학생주임하고 억지로 강요해서 쓴 거예요" "어제 육성희 아줌마들이 와서 정선생님하고 한겨레신문 물러가라고 난리였어요. 우리가 야유하니까 딱 발로 차고 그랬어요" 왜 집에 안가고 남아 있다는 물음에 "우리들 데모하려고 모였어요"라고 대답하는 학생들. 선생님이나 외부에서 시켰냐는 물음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이미 황 교장의 실 땅은 한치도 남아 있지 않았다. "제 친구가 거짓말을 했던 말이에요? 성추행한 교장이 어떻게 학교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추행을 했던 안했던 교장은 책임지고 학교를 떠나야 해요" "학교 애들이 모두 교장을 싫어해요. 교장은 사퇴해야 해요" 이유는 조금씩 달랐지만 교장이 퇴진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주장은 한결같이 단호했다. "교장과의 관계를 생각해 퇴진서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김 아무개 선생은 "이미 한달전에 사건을 알았고 이를 교감선생에게 보고까지 했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서 교장을 전보시킬 것같다고 하자 김 선생은 "교장이 다른 학교로 이동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당연히 교장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황 교장은 공대위의 면담요구를 거부했다. 이어, 학교를 찾아온 장학사의 면담주선마저 거절했다. 교장과의 면담을 성사시키지 못한 공대위 대표들은 오후 5시엔 서울 시교육청을 방문, 교장의 파면과 학교정상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한뒤 이후의 활동을 기약했다.

## 통일관련 정보서비스 나우누리 "go onekr"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상임의장 박순경, 민족회의)는 오는 8월 15일에 '96 평화·통일민족대회'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고, 8·15 본대회 전까지 시민과 각 단체의 ID를 받아 민족대회와 관련한 소식과 자료를 컴퓨터 통신을 통해 직접 서비스하기로 했다. 서비스는 19일부터 시작됐으며, 이에 직접 민족대회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 개인이나 단체는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등 자신의 통신 ID를 민족회의 사무실로 알려주면 되고, 나우누리를 사용할 시민은 "go onekr"로 접속을 하면 된다. (문의전화 745-5872)

독자투고 ☎ 715-9185

## <자료>-AI 고문 및 기타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의 의학적 조사에 관한 원칙 "의사는 고문에 가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편집자주> 국제앰네스티(AI)는 지난 5월22일 [고문 및 기타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의 의학적 조사에 관한 원칙]을 발표했다. AI는 70년대 중반부터 의사가 고문에 직접 참여하는 문제 등에 반대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으나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고문이 성행되고 있으며, 특히 고문협조를 반대한 의료전문가들이 국가에 의해 고문을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판단으로 이러한 원칙을 발표하게 되었다. 또한 AI는 고문에 참여했던 의료인이 직접 유엔에 보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요구했다.

전문 고문 및 기타 가혹행위에 대해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수많은 인권기준이 존재한다. 이러한 인권 기준에는 <고문 및 기타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 방지조약>, <구금 또는 투옥하의 수감자보호에 관한 원칙>, 지역내 조약들, 그리고 의료전문가 단체의 각종 선언 등이 있다. 이러한 조사는 증인을 면접하고, 수감 및 경찰조사 절차를 검토하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적합한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한 조사가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격을 갖춘 경험있는 의료인이다. 다음에 나열하는 원칙은 고문과 가혹행위의 조사에 있어 취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이다.

여성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특히 취약한 사람일 경우 대상자가 원하는 증인의 임피어에서만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통역자가 필요하거나 검진의사가 다른 동료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이외의 제삼자가 검진장소에 임피어해서는 안된다. 만일 제삼자가 퇴장을 거부할 경우 의사는 그 사람의 성명과 직위를 기재하고, 그 제3자의 임피어 검진에 미쳤을 영향에 관한 소견을 기록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자에게 향후 위험을 끼치지 않고 검진을 시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사는 자신의 판단에 의존해야 한다.

조사대상자에게 사용된 억제수단의 성격, 수감자를 호송한 사람의 태도, 및 기타 필요사항. 나. 고문 또는 가혹행위가 발생했다는 시간을 포함하여 접견시 조사대상자가 밝힌 병력의 기록. 다. 가능한 한 모든 상흔의 친연성 사진을 포함한 모든 비정상적인 심신상태의 임상적 검진 기록. 라. 모든 비정상적 증상 및 비정상적 상태의 가능한 원인에 관한 소견. (중략)

- 1. 의사의 신속한 접근 고문 또는 가혹행위의 혐의가 있거나, 고문 또는 가혹행위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존재할 경우 피구금자 또는 수감자는 신속하게 의사를 접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접견은 고문협의를 조사하는 공식기구의 승인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 2. 독립성 검진을 실시하는 의사는 그 대상자를 구금, 심문, 처벌하는 당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의사는 가능한 한 법적 문제와 관련된 검진을 실시해 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 수감자에게 의사의 소속기관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그 사실을 최종 검진기록에 명시하여야 한다. 독자적인 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의사를 찾지 못한 경우에도, 검진의사는 위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검진의 비밀보장 검진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의사는 혼자 그 대상자와 대화하고 그 사람을 검진할 수 있어야 한다. 조사대상자가

- 4. 검진의 동의 의사는 자신의 성과와 소속을 밝히고 검진목적을 설명한 후 조사대상자가 동의를 할 수 있는 경우 검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구하기 전에 의사는 조사대상자에게 검진기록을 받아볼 사람들의 성과와 직위를 말해주어야 한다.
- 5. 진료기록의 열람 의사 그리고 필요한 경우 번역자는 조사대상자의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 6. 철저한 검진 의사는 조사대상자로부터 병력에 관해 소상한 구두진술을 들어야 하며, 그 대상자의 정신상태 평가를 포함한 철저한 임상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신건강 상태의 평가를 포함한 의학적, 병리적, 심리적 추가검사를 조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 7. 보고서 의사는 신속하게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최소한 다음 네가지 사항을 갖춰야 한다. 가. 기본적 사실의 기재(조사대상자의 성명, 검진에 임피어한 사람들의 성명과 소속, 일시, 장소, 기관의 성격과 주소 및 필요할 경우 호실 등), 그리고 검진 당시 조사대상자의 정황(예,

- 8. 보고서의 비밀보장 조사대상자에게 검진결과를 알려야 하며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 그리고 필요한 경우 고문협의를 조사한 책임이 있는 당국에 보고서 전문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자의 동의없이, 또는 권한을 가진 법정당국의 허가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보고서를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 9. 2차 검진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독립적인 의사에 의해 2차적 검진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대리인은 2차 검진을 실시할 의사를 지명할 권리가 있다. 2차 검진도 본 원칙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 10. 윤리적 의무 의사는 항상 자신의 일차적 의무는 세계적으로 인정된 의학윤리규범에 부응하여 환자의 안녕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의사는 고문 또는 기타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를 묵인하지 않고, 그러한 행위를 가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조사대상자의 성격, 신체적 특성, 인종, 또는 신념 그리고 그 대상자 자신 또는 대리자가 고문발생의 의혹을 제기한 사실 때문에 의사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된다.



<이달의 주제-주거권>

국민의 국가에 대한 주거안정 요구는 하나의 권리이다.

-2천년 주거를 위한 지구전략 내용 중-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 표현의 자유 제한 철폐요구 음비법 개폐 대책위 22일 구성

국가보안법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대표적인 악법인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음비법) 개폐를 위해 관련 단체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20일 탑골공원에서 열린 민가협(상임의장 정양업)

목요일집회에서 지난 14일 음비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되었다가 16일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어 나온 김동원(41·푸른영상 대표, 기록영화 감독)씨는 그간의 경과와 함께 22일 구성될 음비법 개폐를 위한 대책위 활동계획을 밝혔다.

김씨는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영화를 만들어 왔다"며 "그 내용들이 음비법에 저촉될 정도로 음란한 영화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음비법에는 3억이상의 실비를 갖춘 곳만이 제작업 등록이 가능하다"며 "이는 푸른영상과 같이 가난한 단체는 표현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악법"이라며 음비법 철폐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결의했다.

한편, 김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악법인 영화법과 음반법, 그리고 방송법의 철폐에 문제의식을 같이한 단체 및 개인들과 함께 대책위를 구성키로 했다. 대책위가 구성되는 데로 김원철씨 뱃지 배포와 서명운동을 벌이며 좋은 비디오투어를 거리에서 상영하여 여론을 형성할 예정이다.

### 검찰의 인권유린 빈번 전국연합, '처벌' 촉구

19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최근 발생한 공안사건이나 대형사건 조사가 과정에서 잠안제우기는

물론, 구타, 인격모독 등의 가혹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며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들을 중형으로써 엄정하게 다스려야 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들어 밝혀진 검찰의 인권유린 행위는 지난달 25일 과천시청 수피 사건에 참고인이던 김 아무개(46·여) 씨의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김 씨의 허벅지를 짓이기고 가슴을 찌르며 자백을 강요한 사실과, 17일엔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손성오(49·건설과장) 씨의 신체감정 결과 손 씨에게서 피명등의 타박상이 발견된 사실 등에서 드러났다.

또, 지난달 25일 경기도 광명에서는 60대 농부가 수원지검의 조사를 받고 나온 뒤 한 달만에 극약을 먹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가족들에 따르면, 이 농부는 아들별인 검사에게 상스러운 욕을 들어가며 벌을 서기도 했고 따귀까지 맞아, 이를 분개하며 식음을 전폐했다고 한다(동아일보 19일자 사설).

### 딸들을 위한 캠프 여성의 전화 개최

한국여성의 전화(회장 신혜수)는 오는 7월21-23일 살롱 유스호텔에서 여중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딸들을 위한 캠프'를 갖는다. 참가비 4만5천원, 접수 문의 269-2962

## 제7회 인권영화제(HUMAN RIGHTS FILM FESTIVAL)

### "영화 통한 인권의식 넓히기"

<편집자주> 현재 미국 뉴욕시에서는 인권영화제가 펼쳐지고 있다. 우리에게도 외국 일일뿐 '인권영화제'(HUMAN RIGHTS FILM FESTIVAL)란 말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질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88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7회를 맞는 이 영화제는 인권의식을 고양시키는 기회이기도 하다. 또한 이번에는 박광수 감독의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선보이기도 했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E-Mail을 통해서 배달되는 일간신문 <INTERNATIONAL NEWS E-WIRE SERVICE>(INews, ISSN 1080-3149) 6월 16일자를 번역·소개한다.

인권문제를 다룬 41편의 영화가 국제영화제의 일부로 이달에 뉴욕에서 상영되고 있다. 개최자들은 그 영화들이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인권문제에 관한 인식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본다.

인간에 대한 전쟁과 불평등의 영향들은 종종 예술을 통해 가장 잘 묘사된다. <검은 솔개들(Black Kites)>이라 불린 최근 영화의 한 장면속에서 해설자는 보스니아 전쟁에서 개인성의 파괴를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은 제7주년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 위치) 국제영화제의 출품작으로 뉴욕에서 상영되고 있다. 많은 다른 영화들과 마찬가지로 관객들이 인권문제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한 개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전 세계 인권침해의 감시자요 보고자인 위치의 영화제 기획자인 Bruni Burres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위치 국제영화제는 위치의 10주년 기념과 세계인권선언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88년에 시작되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지금 위치는 국제영화제가 위치와 위치가 다루고 있는 많은 이슈들에 대해 단지 뉴욕만이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한 아주 유용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결정하였다."

15개국 41편의 영화는 약 7백여편 가운데 선정되었다. 다큐멘터리가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드라마 작품들이다. 올해의 영화들은 4개의 범주로 나뉘는데 ①선거와 민주주의 ②감옥과 자본주의적 형벌 ③여성의 권리 ④중동에서의 자유를 위한 투쟁 등이다.

그 영화들은 모두 인권을 다루고 있지만 95년 이집트 선거에서의 여성 후보자들, 남아메리카의 죄수들 사이에서의 살인, 전쟁무기로써의 강간의 사용등, 주제들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많은 영화들이 픽션이지만 관객들을 전쟁과 평화의 실제 현실로 이끌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 영화 <세 가지 보석 이야기(Tale of Three Jewels)> 속의 어떤 소년은 가자(Gaza) 지구에서 매일 짐승같은 생활이 강요될지라도, 새와 짙시 우화(birds and gypsy fables)의 가상세계 속으로 빠져든다.

또한 영화제에는 한국인 감독 박광수씨에 의해 제작된 회고적인 작품을 하나 담고 있다. Bruni Burres씨는 개인적 정치적 이야기의 구성에 관한 박감독의 기술을 다음과 같이 높이 평가했다.

"그의 모든 작품들은 인권에 관한 주제들을 매우 강렬하게 다루고 있으면서도 매우 비유적이다. 그는 남북 사이 한국 자체의 문제들을 통해 범세계적인 인권의 문제들을 보여주는 것을 훌륭하게 결합시켜내고 있다."

박감독의 가장 최근의 작품은 <A Single Spark(국내에

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로 상영)>이다. 박감독은 그 영화가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에 항거하기 위해 스스로의 몸을 불살라 죽어간 피복노동자 전태일의 이야기를 통해 남한의 과거와 남한 노동운동의 기원을 재창조했다고 설명한다.

"그의 분신으로 인해 한국의 노동운동은 시작되었다. 지금의 한국 노동자들의 상황은 그때와는 매우 다르지만 나의 영화는 70년대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한국의 젊은이들은 한국인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다."

과거를 회고하는 영화의 능력은 인권영화에 거대한 힘을 준다고 Bruni Burres씨는 말한다. 예를 들면, 영화 <Struggles in Steel>은 70년대와 80년대 동안 미국에서 흑인 아메리칸인(African American)의 노동관련 분쟁은 철강공장의 폐쇄에 대한 항거였다고 묘사한다. "뉴스와 텔레비전의 보도가 보여주지 못한 것은 조합 노동자들의 다수가 흑인 아메리칸이었다는 데 있다. 이 영화가 보여준 것은 15년 전에 일반대중에게 보여진 것과는 정반대였다. 그런 면에 있어서 나는 영화의 영향이 거대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는 역사를 다시 쓰게 한다."

이번 국제영화제는 6월29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된다. 그리고 그후에 미국의 다른 도시에서 상영되고 텔레비전에 방영된다. JYOTI THOTTAM(뉴욕)

<인권정보자료실 제공>

### ○행사와동정○

#### □ 하시모토 일본 총리 방한을 앞둔 기자회견

- 일시:6월21일(금) 오전11시
- 장소: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 1308호
- 주최: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365-4016)

#### □ 열한번째 "단오징어"

- 일시:6월21일(금) 오전11시~오후4시
- 장소:장충동 여성평화의 집 앞마당
- 주최:한국여성의전화(269-2962)

#### □ 통일맞이 분단문화기행

- 일시:6월23일(일) 오전8시
- 장소:철원역, 노동당사, 도피안사 등
- 회비:2만8천원(통일맞이 회원 2만3천원)
- 출발장소: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옆 시영주차장
- 주최:통일맞이 철원만겨레모임(313-8201)

#### □ 서울시장 및 시의회 1년 여성정책평가토론회

- 일시:6월25일(화) 오후2시~4시
- 장소: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한국여성민우회(269-5763)



<이달의 주제-주거권>

국민의 국가에 대한 주거안정 요구는 하나의 권리이다.

-2천년 주거를 위한 지구전략 내용 중-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 일수상 방한, '과거청산' 한 목소리 위안부 법적배상, 한일협정 폐기

22일 하시모토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정신대 문제를 비롯한 일제 과거청산에 대한 요구가 각계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21일 오전 11시 기독교연합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참가단체들은 △'위안부' 범죄에 대한 '민간기금' 지급 계획의 중단 △자료공개 △사죄 및 법적 배상 △위령비 건립 △책임자 처벌 등의 요구사항을 일본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정부측에도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정부에게 '국민기금' 지급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과 '위안부' 문제에 관한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준수할 것을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위안부' 피해자 심미자(73) 할

머니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몸값이 아니라 일본정부의 죄값"이라며 "1백57명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과 자존심을 회복시켜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한편, 정부가 22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의제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 민간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15대 국회의원 1백91명은 일본정부의 '민간기금' 계획의 중단과 전쟁범죄 인정 및 법적 배상등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관련내용 2면).

이번 서명을 주도한 이미경(민주당) 의원 보좌관 장세균(40)씨는 "국회의원들의 입장과 서한을 공식적으로 일본 수상 및 의회에 보낼 예정이며, 국회 개원 후 위

안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하시모토 수상의 방

한과 한일협정 체결 31주년을 맞아 "굴욕적 불평등조약인 한일협정을 폐기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21일 낮 1시 탑골공원에서 [한일 과거청산 범국민운동본부] (상임의장 김명운) 주최로 '민족사 바로 세우기 촉구 결의대회'가 열려 한일협정 개정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 박충렬씨 징역10년 구형 "전국연합 자료집 제작·배포, 이적성 있다"

21일 열린 박충렬(전국연합 사무차장)씨의 재판에서 조성욱검사는 이전과 같은 형량인 징역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김사는 박씨의 공소 사실중 전국연합 대의원 자료집을 제작·배포한 것에 대해 "만약 동일원 관계자가 그러한 문건을 만들었다면 이적목적성이 없다고 볼수 있지만 박씨와 같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적의 목적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해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사람에게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오후3시 서울지법 형사 1부 909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측 증인 유동렬(북한학회 대남전략 분과위원, 월간 민족중론 편집위원) 씨는 "전국연합측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주한미군 철수와 국보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등은 모두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것"이라며 "범민련과 전국연합, 그리고 민자동 등은 구성원 대부분이 주사파인 비슷한 단체"

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사상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의 사상을 주체사상이라는 틀안에 끼워넣으려고 하는 공안당국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안기부와 검찰이 나에게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한 검찰의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변론을 맡은 윤기원 변호사는 "검사측은 박 씨를 증거도 없이 간첩으로 몰아 수사 한 뒤, 이전 활동을 들어 고무찬양과 이적표현물 소지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안당국에서 50여일을 조사받고 나오면 국보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증거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다.

이번 재판은 검사의 구형이 있는 뒤, 선고공판 전에 검찰측이 수사를 더 해야겠다며 재판계기신청을 한데 따른 것이다. 선고공판은 7월12일 오전 11시.

### <성명서>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실한 책임이행을 촉구하며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 15대 국회의원들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관계 정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는 한·일 양국 공동으로 개최하게 될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가 한일간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한일간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해서 과거 식민지 침략과 지배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함께 진실한 사과가 요구되며,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인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확실한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략) 일본정부는 이와같은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를 이행할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법적책임을 부인하며,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이 반대하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을 만드는 오는 7월 중에 피해자들에게 2백만엔(1,6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처사는 유엔까지도 지적하고 있는 이 문제의 비인도적인 범죄의 본질을 왜곡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일본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진상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에 대해 관심과 함께 환영을 표하며 차체에 일본 정부도 다음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위안부 문제가 비인도적인 전쟁범죄임을 인정하고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등을 이행.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기금' 계획 중단.

1996년 6월 20일 서명참여 국회의원 일동

- |                 |             |             |              |                |      |     |     |
|-----------------|-------------|-------------|--------------|----------------|------|-----|-----|
| 강경식             | 강성재         | 강홍식         | 강현욱          | 권영자            | 권익현  | 권철현 | 김기재 |
| 김기춘             | 김 덕         | 김도연         | 김명운          | 김무성            | 김석원  | 김영구 | 김영선 |
| 김영태             | 김순환         | 김영일         | 김일운          | 김재천            | 김종하  | 김찬우 | 김충일 |
| 김태호             | 김학원         | 김호일         | 나오연          | 노기태            | 노승우  | 맹형규 | 목오상 |
| 박관용             | 박명환         | 박범진         | 박성환          | 박시근            | 박승민  | 박종우 | 박종우 |
| 백남치             | 서삼목         | 서창원         | 서 훈          | 신경식            | 신상우  | 신영근 | 안상수 |
| 양규구             | 오세웅         | 오양순         | 원유철          | 유홍수            | 윤한도  | 이경재 | 이규택 |
| 이만섭             | 이명박         | 이사철         | 이상배          | 이상현            | 이신범  | 이우재 | 이우희 |
| 이원복             | 이재명         | 이재오         | 이해구          | 임진출            | 전성훈  | 전용원 | 정영훈 |
| 정의화             | 정재철         | 조웅규         | 주진우          | 차수명            | 한승수  | 한이현 | 홍문종 |
| 홍인길             | 홍준표         | 황규선         | 황우여(이상 신한국당) | 권노갑            | 김승출  | 김원길 | 김원길 |
| 김근태             | 김민석         | 김병태         | 김상현          | 김영배            | 김영환  | 김옥태 | 박광대 |
| 김진배             | 김충조         | 김태식         | 김한길          | 김홍일            | 남궁진  | 박광대 | 박광대 |
| 박상천             | 박정수         | 박정훈         | 설 훈          | 손세일            | 신기남  | 신기하 | 신낙균 |
| 안동선             | 양성철         | 유선호         | 유재건          | 윤철상            | 이길재  | 이동원 | 이상수 |
| 이석현             | 이윤수         | 이해찬         | 이 협          | 임복진            | 임태정  | 정균환 | 정동영 |
| 정세균             | 정한용         | 정호선         | 정희경          | 조성준            | 조순승  | 조순형 | 조찬형 |
| 최종규             | 채영석         | 천용택         | 천정배          | 최선영            | 최재승  | 최희준 | 추미애 |
| 한영애(이상 새정치국민회의) | 강창희         | 구헌서         | 김고성          | 김광수            | 박주일  | 박종근 | 박종근 |
| 김범명             | 김복동         | 김선길         | 김종필          | 김철환            | 김병희  | 이양희 | 이양희 |
| 박철언             | 변용진         | 어준선         | 이건개          | 이동복            | 이병희  | 이양희 | 이양희 |
| 이재선             | 이정무         | 정상구         | 정상천          | 정석모            | 정우택  | 정일영 | 조종석 |
| 지대성             | 한영수         | 한호선         | 함석재          | 허남훈(이상 자유민주연합) |      |     |     |
| 권기철             | 권오을         | 김홍신         | 이규정          | 이미경            | 이부영  | 이수인 | 이중재 |
| 제정구             | 조종연         | 하경근(이상 민주당) | 권정달          | 김병준            | 김용 준 |     |     |
| 김용갑             | 이해봉(이상 무소속) |             |              |                |      |     |     |

### <세계주거회의의 참가기> "민간 참여보장과 민주적 정책결정 필수"

이정운(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정책연구부장)

지구촌의 재난문제를 총망라하는 금세기 마지막 유엔이 주관하는 회의인 제2차 세계주거회의(HABITAT II, 세계주거회의)가 세계 1백20개국의 정부대표와 2천1백여명의 민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6월 3-16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도시화 문제를 국제적, 국내적으로 개발계획에 우선순위로 놓을 것, 도시관리와 주택개발에 있어서 새로운 정책과 전략수립을 촉구할 것,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에 모든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 정부대표단을 비롯하여 한국민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등 1백50여명이 참석하였다. 4일 한국정부는 이번 회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의회, 민간단체와의 파트너쉽 강화와 지속가능한 주거개발, 국제협력" 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연설문의 내용과는 달리 민간단체와의 파트너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엔은 주거회의를 준비하면서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조했지만, 한국민간위원회의 요구로 정부대표와 민간단체 대표가 잠시 만났을 뿐 협력관계는 없었다. 심지어 정부 대표 연설문, 국가보고서 등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몇 번을 거듭 부탁한 끝에 겨우 연설문만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포럼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삼엄한 경비와 검문검색을 거쳐야 했다. 포럼장내에서도 마찬가지로는 데, 포럼장 안 곳곳에 배치된 사복경찰들은 활동을 위축시켰다. 결국 한 강의실에서 열리게 되었던 터키의 인권 문제에 대한 토론이 터키 정부당국과 경찰에 의해 폐쇄되어 버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한국민간위원회는 5월 31일 아시아지역 주민 지도자회의를 시작으로 아시아인의 밤, 아시아 도시문제에 대한 토론회, 아시아·아프리카·남아메리카 3개 대륙 민간단체간의 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토론회의 결과 지속적인 연관관계 형성, 각 대륙별 책임국가 선정, 인터넷에 주거관련 홈페이지를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6월 4일에는 아시아의 12개국과 함께 아시아지역의 공통의 과제인 '주거권 확보', '강제철거 반대' 등을 외치며 포럼장내에서 집회와 대중문화행사를 가졌다.

이번 회의의 주요 쟁점은 주거권,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부가하는 문제, 동등한 또는 공정한 개발 표현문제, 선진국 의무부담 문제, 이번 회의 의제에 대한 이행 조직 기구의 문제이다. 이중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역시 주거권의 문제였다. 비동맹국(G77), 유럽연합(EU)측과 미국, 한국, 일본등의 대립이 계속 되었으나 결국 미국, 한국 등은 주거권을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하게 되었다.

지난 16일 막을 내린 세계주거회의는 한국의 현 상황과 비취볼 때 몇 가지의 과제를 남기고 있다.

첫째, 범 지구행동계획을 토대로 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Plan of Action) 실천이다. 둘째, 정부에서 동의한 주거권 문제를 어떻게 법적으로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셋째, 민간의 참여보장과 민주적 정책결정의 문제이다. 민간의 참여보장과 민주적 정책결정은 국가행동계획을 세우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며 범 지구 실행행동계획을 실현하는 받침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달의 주제-주거권>

국민의 국가에 대한 주거안정 요구는 하나의 권리이다  
-2천년 주거를 위한 지구전략 내용 중-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 “남은 여생 혈육과 보내고 싶다” 전쟁포로 3인, 인권고등판무관에게 탄원서 제출

그동안 자신을 전쟁포로라고 주장하며 제네바협정에 근거해 북한송환을 요청했던 김인서(68·33년 7개월 복역), 함세환(65·34년 2개월 복역), 김영태(66·33년 11개월 복역)씨 등 3명의 장기수들이 2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동환,

KNCC)를 통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호세 아얄라 라소(Jose Ayala-Iasso)씨 앞으로 보낸 이번 탄원서에 대해 신승민(37·한국교회 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불교 인권위등 많은 인권단체들이 한국정부와 적십자사

를 통해 이들의 송환을 요청했지만 번번히 거절당해 마지막 희망을 갖고 탄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권오기 통일원장관에게도 같은 날 위의 탄원서를 발송해 다시 한번 이들의 송환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인서 씨는 탄원서에서 “나는 30년 이상을 수감되어 있을 만큼 파렴치한 죄인이 아니”라며 “노동할 기력도 없는 병든 이 노인을 고향으로 보내 남은 여생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함 씨는 “현재 남한 정부는 제네바 협정의 ‘포로’는 전대행위가 종료된 후 지체없이 송환해야 한다’는 조항과 세계인권선언의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나라든 떠날 수 있으며 자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을 무시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원 관계자는 “세사람은 현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한국시민으로 살고 있어 전쟁포로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에는 독일 바덴주교회 선교인치국 하이델베르크지부 소속 목회자 28명이 이들의 송환을 요구하는 서명서를 KNCC 측에 보내와 이들 송환문제

가 국제적인 관심사임을 반영했다.

### 제3자개입협의 2명 구속 AI, 노동법 개정 재촉구

21일 국제앰네스티(AI)는 제3자개입 협의의 구속된 조명태(32·금속연맹 구미지부 사무국장) 씨와 김승현(구미지역 노동조합 연대회의 사무차장)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정부에 보내왔다.

AI는 “한국정부가 지난 4월 노동법개정 의사를 밝힌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을 구속한 것은 무척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제3자개입 금지 조항의 폐지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조 씨 등은 한국합성 사태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제3자개입 금지 조항’을 적용받아 구속됐다. 그러나 제3자개입 금지 조항은 정부가 개혁대상 1호로 올려놓았던 대표적 독소조항이고, 한국합성 사태가 지난 5월 노·사·정 합의에 의해 원만히 해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뒤따르고 있다.

민중노총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노동운동 탄압과 관련해 “관 폐지될 법률을 적용해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것은 정부의 모순되고 경직된 관행을 유감없이 보여준 것”이라며 “독소조항의 적용을 중단하고 구속 노동자들에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 <사랑방, 인터넷 접속주소>

## “해고자복지·임단협 논의하자” 민주노총, 경총에 공식대화 제의

공공부문 사업장에 이어 민간사업장에서도 해고자복지 문제가 올해 임·단협의 뜨거운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이동관)로 대표되는 자본측과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을 필두로 하는 노동측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1일 “해고자복지 문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공식적으로 해고자복지를 반대한 경총의 성명이 발표된 뒤, 22일 민주노총 해고자복지 공동투쟁위원회(위원장 허영구) 소속 30여명의 조합원들은 경총을 향의방문, 해고자복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고자복지와 임단협 등 당면 현안의 해결을 위한 경총과의 공식 대화를 제의했으며, 26일 해고자복지를 촉구하는 경총 향의방문을 재차 전개하고 29일엔 대규모 해고자복지 촉구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경총의 발표에 이어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도 논평을 통해 “독재정권의 노동악법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는 것은 현행 노사관계개혁의 출발점이자 전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고 문제는 노동쟁의조정법에 명시된 노사교섭의 대상임에도 재계가 이를 회피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노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잘못된 태도”라고 비난했다.

현재 민간기업의 해고자는 5백여 사업장에 총 1천여 명으로, 현대중공업(18명), 한진중공업(10명), 대림자동차(10명), 대우케리어(15명) 등이다. 한편, 민주노총이 밝힌 자

료에 따르면, 6월 20일 현재 쟁의발생을 결의한 사업장이 88개에 이르고 파업중인 노조만도 대동공업, 효성중공업, 대림자동차 등 23개 노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아직 미타결된 공공부문 사업장 가운데 조폐공사가 25일, 과학기술노조가 26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 김복사등 석방촉구 WCC, 법무장관에 항의서한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지난 18일 안우만 법무장관에게 김해성(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소장) 목사와 양혜우 사무국장이 구속된 것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

항의서한에서 WCC는 지난 3일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소 직원들과 경찰이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에 난입해 머리에 부상을 당한 김복사를 구속한 것과 이를 항의하러 성남경찰서를 방문한 양 사무국장을 체포한 것에 대해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혐의를 제공하는 교회와 인권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WCC측은 “경찰에 의한 고압적이고 월권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서 한국정부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법률체계를 고안할 법에 명시된 노사교섭의 대상임에도 재계가 이를 회피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노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잘못된 태도”라고 비난했다.

현재 민간기업의 해고자는 5백여 사업장에 총 1천여 명으로, 현대중공업(18명), 한진중공업(10명), 대림자동차(10명), 대우케리어(15명) 등이다. 한편, 민주노총이 밝힌 자

## 주간/인/권/호/름 (96년6월17일부터 6월23일까지)

<17일>  
만도기계 노조, 회사측과의 임금협상 결렬로 6개 공장에서 전면 파업 돌입/경북 경산경찰서 김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등 요구하며 시위주도한 영남대 총학생회장 권택홍(27·공법4)씨 집시범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18일>  
군대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해온 일본 시민단체등으로 구성된 ‘유하라, 유엔 권고’ 국가보상·책임자 처벌 등 촉구하는 6만2천여명의 서명 일본정부에 전달/AI, 96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국보법으로 정치범 1백50여명에 양심수를 포함해 수백명의 정치범이 체포되었다고 밝히/한국통신 노조 교육국장 오용철(41) 간담으로 별세/신양중 황수연교장, <한겨레신문> 보도와 관련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고소/새벽 경찰 경북대학교에 병력투입해 인혁당추모비 강제 철거, 반발한 학생들 격렬시위

<19일>  
신양중 성추행 교장 퇴진 및 학생인권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30여명 신양중 앞에서 황교장퇴진 요구시위/성동교육청 신양중 황수연(55)교장 전직시킬 것을 서울교육청에 요청

<21일>  
경총 해고자 복지문제가 노사협상 대상이 될 없다는 ‘최근 노사분규 사태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성명 채택/수원지검 공판부 김학승검사, 이상희(72)할머니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법정 최지형인 징역3년 구형.

<22일>  
‘창작과 표현의 자유 쟁취 및 비디오 관련법 개폐를 위한 대책회의’를 발족 음비법 개정 시작으로 검열철폐 운동 벌이기로/오후8시20분경 광주시 동구 서석동 동구청 앞길에서 시위현장 지나던 주민 박건주(52·세탁업)씨 이마에 최루탄 맞아 두개골 금가고 함몰해 중태

<23일>  
정대협 소속 위안부출신 할머니를 비롯한 회원 10여명 한일정상회담 열리고 있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피해보상등 요구하며 시위

<해설>=====  
지난 22일 정부는 학생들의 시위나 민원인들의 집단행동 등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 방식에서 벗어나 강력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정부의 입장발표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난 5월7일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치안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정부는 “학생·재야활동의 좌경화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력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뒤 전국학생정치연합 11명, 전학투련 2명, 나라사랑친척회 3명, 해방노동자총일전선 4명, 사노맹 6명, 범민련 2명 등 한달 새 국보법 관련 구속자들도 두 배 증가했다. 더욱이 이들은 과거행적을 이유로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고자복지·제3자개입금지등을 내걸고 임단협에 들어간 상황에서 ‘회염병의 증가등 날로 과격해져가는 학생시위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식의 이유로 강력 대응방침을 거듭 밝힌 것은 너무도 공색한 변명은 아닐까. 다른 저의는 없는 것인지, 또다른 사건의 전주곡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 <3명 포로의 삶>

#### “나는 이렇게 포로가 되었다”

◎김인서 그는 지난 50년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선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남 광주에 도착해 빨치산활동을 하던 중 51년 국군부대에 생포되었다. 그뒤 광주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포로로 치우를 받으며 생활했으나, 포로수용소측의 방침이 바뀌면서 포로들을 심문하고 조서를 작성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52년 4월 고등군법회의 법정에서 20년형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당시 광주형무소)에 이송되어 꼬박 20년을 복역했으며, 출소 뒤 사상진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8년7개월동안 청주보안감호소에 수감되었다가 89년 10월 출소했다. 현재 김 씨는 만성 간염과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다. 북한에는 2명의 딸과 여동생 그리고 형수와 조카가 살고 있다.

◎함세환 그는 50년 7월 조선인민군 제2사단에 입대, 53년 6월에 체포되었다. 그뒤 법률로 공포조차 되지 않은 「국방경비법」 32조에 의해 무기징역을 언도받아 대구 교도소(당시 대구민간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73년 6월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하지만 75년 사상진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4년동안 청주감호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지난 89년 8월 출소했다. 함 씨는 현재 전남 광주에서 주유소 근무를 하며 생활을 하고 있으며, 비전향 장기수들과 함께 대전 소재 「사랑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 북한에는 누이와 조카가 생존해 있다.

◎김영태 그는 50년 조선인민군 10사단에 배속되어 전투 중 왼쪽눈에 관통상을 당한 뒤 생포돼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고 고등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언도받았으나 20년형으로 확정되어 수감되었다. 청주보안감호소에서 89년 출소해 현재 광주에서 당제원을 하며 생활을 하고 있다. 북한에는 아들과 3명의 손자, 2명의 남동생과 누이가 살아있다.



<이달의 주제-주거권>

국민의 국가에 대한 주거안정 요구는 하나의 권리이다  
-2천년 주거를 위한 지구전략  
내용 중-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 ILO, 한국정부에 강력 권고 민주노총 합법화, 제3자개입금지등 철폐

국제노동기구(ILO) 집행이사회는 23일 한국정부측에 제3자 개입금지가 노조의 자유로운 기능을 제약하므로 노동쟁의조정법 13조 2항(제3자 개입금지) 및 45조 2항(방위산업체 노동자 쟁의행위금지)과 제3자 개입금지 등의 별첨규정을 철폐하고, 노동조합법 3조 5항을 개정해 민주노총, 전교조, 자동차연맹 등 노조 상급단체를 합법화할 것을 요청했다.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 및 집행이사회 결정사항 다음호 게재.

집행이사회 산하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민주노총의 제소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5항에 걸쳐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집행이사회에 한국 정부가 비상임이사국으로 참석한 상태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이어서 한국정부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행이사회는 한국 정부가 권영길 위원장의 제

3자 개입금지등과 관련한 협의가 철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민주노총 양규현 수석부위원장, 단병호 부위원장 등을 석방하고, △단결권 행사로 인한 구속·수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할 것 △민주노총이 단체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등 록을 허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진전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전교조 결성에 대해 교사들의 정당한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재 반조치를 단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나아가 노동자 단결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기업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조합원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노조대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 1항의 개정을 요청했다. 정부측이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이 해고노동자인 점을 들어 문

정과 권고사항에 대해 민주노총 정성희(38) 대외협력 부국장은 "정부의 노조활동 탄압에 대한 항의와 시정을 촉구할 것이다. 제3자 개입금지조항의 폐지는 ILO에서 거듭 권고해 온 것으로, 정부도 이 규정의 삭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투기간중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노동자가 구속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구속·수배된 노조간부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한편 민주노총 설립신고서를 다시 내고, 정부와 사용자단체에 해고자복지 등 당면 노동현안의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제안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2면>.

이같은 집행이사회 결

### 우리시대 인권파수꾼

###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의 바다로 드디어 항해를 시작합니다.

접속주소 <http://www.interpia.net/~rights/>

1.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인터넷 인권하루소식>을 6월1일 본격 서비스한데 이어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를 21일부터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에는 그날그날의 한글판 <인권하루소식>을 올리는 것은 물론 한국인권의 역사를 기록하는 영문판 <1996 Korea Human Rights Chronicle>와 국내사회단체 홈페이지, 국외인권·사회단체 홈페이지를 연결한 <관련 웹사이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종합보고서 영문판 Human Rights in South Korea도 올리고 있습니다.

3.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인권단체들은 물론 해외동포까지 빠르고 정확한 한국의 인권상황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감시활동으로 인권증진을 위해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세계인과의 교류하는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를 통해 이제 새로운

### 주요 공판 안내

- 6월26일(수) 유영기, 국보법, 오전10시, 합의1부, 418호 선고
- 6월27일(목) 전두환의 15인, 반란수괴등, 오전10시, 합의30부, 417호 속행
- 6월28일(금) 연성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오치근,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신건  
유현수, 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425호 속행  
정미은, 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425호 속행  
-이상 서울형사지법

## 노조위원장 음독자살 기도 마이크로전자노조 지키기 위한 총투쟁 전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공 부문 사업장의 협상에서 일 부 해고노동자가 부직 합의 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고 나서는 등 을 임단협 최대 쟁점인 해고자 복지문 제가 타결의 실마리를 보이 지 않고, 노사 대결국면으 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악의 사태 를 맞고 있는 사업장중 한 곳인 인천에 위치한 대한마 이크로전자(회장 최만립, 마 이크로전자)이다. 특히 마이 크로전자는 최 회장 무노 조정책으로 지난 86, 89년 2 차례에 걸쳐 노조가 와해된 경험을 갖고 있어 노조원들 은 '이번 탄압도 현재의 노 조를 와해시킬 음모'라며 강 력히 대처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12일 마 이크로전자 노조위원장 김 명숙(27)씨가 농약(계초제) 을 먹고 음독 자살을 기도 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부평 안병원에서 치료중인 김씨 는 작년 6월 자신의 부당전 출을 알리기 위해 홍보물을 배포했으며 회사측이 이를 문제삼아 해고조치 했다.

이 소식을 접한 노조간부 들은 13일부터 회사내에서 농성을 시작했으며, 같은 날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지 역사회 단체, 인사들을 중 심으로 「마이크로전자 노 조 탄압 분쇄 및 김위원장 원적복직 추진 특별위원회 」를 구성해 적극적인 공동 대응에 들어갔다.

하지만 바로 당일 부평경 찰서측은 농성자 65명을 집 시범 위반혐의로 연행했으 며, 이후 연행에 항의하는 노동자 47명을 또다시 연행 했다. 또한 17일에는 회사

앞에서 농성을 위해 텐트를 치는 노동자 32명을 연행했 고, 20일 연행에 항의하는 노동자 18명을 다시 연행하 는 등 본격적인 회사원들기 에 나섰다. 현재 대부분의 노동자가 석방되었으나 조 봉호(민주노총 인천본부 조 직국장)씨와 조광호(인천지 역해고노동자협의회 의장) 씨가 업무방해와 도로교통 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 었다.

노조측은 지금까지 교섭 을 진행해 진전이 없을 경 우 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최정진 노조교육 부장과 김은영 사무장이 25 일 현재 9일째 삭발·단식투 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22 일 성명서를 발표해 "5공화 국 방식의 노조탄압이 계속 되고 있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정부와 사 용자측이 노조의 정당한 요 구를 외면한다면 올바른 노 사관계 개혁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 인 천본부측은 이번주를 '마이 크로전자 노조탄압 투쟁의 주'로 정해 28일까지 회사 앞 정문에서 오후 6시 항의 시위를 벌이며, 오는 29일 에는 부평역에서 대규모 집 회를 계획하고 있다.

마이크로전자는 지난 70년 미국 굴지의 주문자 생산방 식 반도체 회사인 AMI 한 국지사의 외자업체로 출발 했으며, 최 회장이 마이크로 전자 주식을 매입해 독립했 다. 현재 생산직 노동자가 필리핀 이주노동자 83명을 포함해 4백70여명이며, 조합 원은 60여명이다.

### 구독료! 아래 지로로 납부

구독료 납부로 <인권하루소식>에 힘을 주십시오.

지로번호: 7618848

## 보수적 여성관 여전 서울시정 1년 여성정책평가

지방자치 1년을 보낸 서울 시의 여성관련 사업은 여전 히 보수적 여성관을 벗어나 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25일 오후 2시 한국여성민 우회(상임대표 이경숙)가 개 최한 '서울시정 및 시의회 1 년 여성정책평가 토론회'에 서 이경숙 대표는 "서울시 의 추진사업에는 아직도 전 통적 성별역할 분업론이 나 타나고 있다"며 "여성 역시 적성과 능력에 따라 평등하 게 일하고 대우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는 △여성고 용의 확대와 시공무원 채용 에 있어 여성할당제의 적용 △여성능력 개발사업에 대 한 예산액 증액 등을 개선 점으로 제안했다.

## 교수제임용제 개정 촉구 학문자율·대학민주화 침해

전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회장 주자문), 참여민주사 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 배등) 등 8개 학계 및 시민 단체들은 25일 오전 11시 종로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수제임용제」의 개

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수제임용제도가 교수들간의 경쟁과 연구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명목으 로 75년 입법화됐으나, 양 심적 지식인이나 교수를 탄 압하는 정치탄압법적 성격 을 띄면서 오히려 학문의 자율성과 대학의 민주적 반 전을 침해하는 폐단을 낳아 왔다"고 주장했다.

「교수제임용제 악법」 개 정을 위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들 단체들은 교수제임용제의 악용사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계속 추진 하기로 했으며, 이미 지난 12일부터 교수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교육감 선출, 개선요구 충남지역 교사 설문조사

전교조가 충남도내 초중 고 교사 1천1백56명을 대상 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 답자의 99.7%가 '교육감 선 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해 응답자의 49%는 교원 직 선, 28.2%는 교원과 학부모 에 의해, 18.1%가 주민 직 선으로 선출해야한다고 응 답하는 등 94.5%가 교원과 주민에 의한 교육감 선출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사의 자유위원회란?>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제87호(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조약), 98호(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조약) 조약에 관한 노·사·정의 불만을 다루는 기구 이나, 당연히 노동단체에 의해 가장 많이 이용된다. 제 87호, 98호 조약의 미비준국의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 으며, 따라서 국내 노동단체들은 한국정부가 비준하지 않았음에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결 사의 자유가 헌장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ILO 가입시 무디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노·사·정 3인씩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회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경우 당해국을 방문, 직접 조사한다. 그 뒤 권고를 포함한 보고서를 ILO집행이사회에 제출한다. 해당국은 그 권고에 구속 당하지 않으나 국제여론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한국과 ILO」(박홍규 지음, 형성사 1991)에서>.



<이달의 주제-주거권>  
국민의 국가에 대한 주거안정  
요구는 하나의 권리이다  
-2천년 주거를 위한 지구전략  
내용 중-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 시위대, 이적단체일 수 있다

### 남총련 최근 32명 구속, 도경 특별수사본부 설치

광주전남지역에서 국가보안법·집시법 혐의로 연행·구속이 늘어나고 있다. 시위대 활동에 국보법을 적용하는가 하면, 갓 입학한 96학번 신입생들에 대한 구속이 늘어나는 등 예전에 보기 힘든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전남광주지역 총학생연합」(남총련)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경찰에 연행된 사람은 53명에 이르며, 이중 구속자는 3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재학생이거나, 과거 대학시절 활동과 관련해 군복무중 또는 졸업한 상태에서 국보

법이나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특히 지난 11일 기무사에 의해 연행·구속된 박형대(25) 씨등 전남대 출신의 현역군인 6명은 남총련 산하 '민족해방군'이라는 이적단체에 가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남총련 관계자는 "「민족해방군」은 '오월대'라는 속칭 전투조직을 일컫는 것으로 이는 시위대원의 선두에서 경찰의 진압을 저지하고 시위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뿐, 어떤 단체나 조직이 아니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그는 '대선자금 공개'나 '공안단압 분쇄' 등을 요구하는 반정부 선전전이나 신한국당 항의방문 투쟁 등에서 구속된 18명중 96학번 신입생이 7명, 95학번이 9명이나 되는 등 예전 같으면 훈방조치로 끝날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경은 특히 조선대와 북한 김정적 사법대학과의 자매결연식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까지 설치했으며, 조선대생들의 연행·구속이 계속되고 있다. 18일 당해보니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며 "실지로 겪어본 이들은 범조인들의 전 반적인 인식의 변화없는 이러한 토론회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엔 학교 앞에서 귀가하는 재학생 17명을 무조건 연행한 뒤 혼방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러한 일련의 구속사태에 대해 남총련 조국통일위 관계자는 "과거 같으면 간첩사건을 터뜨려 여론을 잠재울텐데, 이제 국민이 속지 않으니 아예 반대자들의 입을 막겠다는 의도로 구속파티를 벌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국민기금 반대 강연회 여연 지은희대표, 방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지은희 공동대표는 일본 오사카의 재일교포 1세대들을 위한 「색동의 집」기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한다. 그는 3일동안의 일본 방문 기간중 29일에는 '관서여성네트워크' 국민모금을 반대하는 모임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일본 정부의 국민기금 모금 반대에 대한 강연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 남부노동법률상담소 28일 개소식

남부노동법률상담소(소장 조경수, 상담소)가 28일 개소식을 갖는다. 바뀐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1125의 10 삼지빌딩 303호 전화: 852-1568

### 구독료! 아래 지로로 납부를

구독료 납부로 <인권하루소식>에 힘을 주십시오.

지로번호: 7618848

자료-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 및 집행이사회 결정사항(사건 번호 1865)

## “한국정부는 제3자 개입금지 철폐, 민주노총·전지협등 합법화 하라”

###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심의 결론

<중략>

244.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 관해서 본 위원회는 이전에 대한민국과 관련된 다른 건 [보고서 286호 (사건 번호 1629) 문단 564, 보고서 294호 (사건 번호 1629호) 문단 259]에 대해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러한 금지조치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고 대한민국 정부에 상기시키고자 한다.

245. <중략> 본 위원회는 단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지도자를 구속, 감금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결정과 원칙 요약문, 4판, 1996년 발행, 문단 69 및 70 참조). <중략>

248. 권 위원장이 불법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는 혐의에 대해 본 위원회는 특정 단체가 일반인들로 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자 할 때 관련 행정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을 주목한다. <중략> 그러나 본 위원회는 자신들이 선택하는 조직을 건설하고, 자체적인 현장과 내부 규약 및 규칙을 확립할 수 있어 그 조직을 운영하고 활동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는 재정적 자립을 전제로 한다는 원칙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원칙

에 따라 노동자 조직의 제정 활동,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제

리를 완전한 행동의 자유와 조직원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추구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는 일반 원칙을 주목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권리가 완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이 지도부의 자격이나 선거 운동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는 것과 같이 이 권리의 행사를 손상시킬 수 있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은, 해당 노동조합의 해고 사실이나 자신이 수행하던 일에서 면직되었다는 사실은, 해당 노동조합의 헌장(규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노동조합 내에서의 그의 지위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요약집 문단 353, 373 참조). <중략>

249. <중략> 본 위원회는 기존의 등록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새롭게 등록을 추구하는 노동조합이 대표하고자 하는 이해관계를 (이미) 충분히 대표하고 있을 경우 그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특정 경우에는 자신이 선택하는 조직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결사의 자유원칙에 반하는 것임을 대한민국 정부가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요약집 297 문단 참조).

250. <중략> 전교교직원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사건 번호 1629호 심의 결정에서 전교조의 결성은 교사들의 정당한 단결권 행사이라고 이미 결론 내린바 있으며 그에 따라 사립 및 공립 학교의 교사들이 단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보고서 286호 문단 562, 563, 569; 보고서 291호 문단 419; 보고서 294호 문단 271 참조). <중략> 본 위원회는 전국지하철노동조합 협의회와 현대그룹노동조합 협의회가 어떠한 근거로 대한민국 노동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규정하는지를 납득할 수 없음을 밝힌다. <중략>

251. <중략>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노동자의 조직이 자신의 대표들을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

제반조치를 단행하라'는 골 표현을 모두 '-하라'로 생각했음-편집자주)

- 권 위원장에 대한 모든 혐의를 철폐하고 앞으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단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구속, 수감되지 않도록 보장하라.

- 민주노총이 단체협상권 및 전국적인 3자 협의에의 참여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전국자동차산업연맹, 전국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회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단행하라.

- 전교교직원노동조합에 소속된 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사립 및 공립 학교 교사들의 자유로운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라.

- 제3자 개입 금지 조항(노동쟁의조정법 13조 2항 및 45조 2항)을 철폐하라.

- 노조의 재정 독립을 위해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3조를 철폐하라.

- 노동자들의 조직 결성과 참여/가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3조 5항을 개정하라.

- 노동자 조직이 완전한 자유 속에서 자신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23조 1항의 개정하라.

### 집행이사회 권고 사항

<권고사항은 요약·정리했으며, '-하기 위해 필요한

###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가 개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접속주소 <http://www.interpia.net/~rights/>

1 <인터넷 인권하루소식>을 서비스한데 이어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를 21일부터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홈페이지>에는 한글판 <인권하루소식>을 올리는 것은 물론 인권의 역사를 기록하는 영문판 <1996 Korea Human Rights Chronicle>와 국내사회단체 홈페이지, 국외인권·사회단체 홈페이지를 연결한 <관련웹사이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종합보고서 영문판 Human Rights in South Korea도 올리고 있습니다.

3. 세계인과 호흡하는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를 통해 이제 새로운 인권운동의 국제연대의 장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이달의 주제-주거권>

국민의 국가에 대한 주거안정 요구는 하나의 권리이다  
-2천년 주거를 위한 지구전략 내용 중-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 “목사고 뭐고 다 끌어내!” 경찰, 성남검찰청 앞 기도회 강제해산

26일 성남에서는 기도회에 공권력이 투입돼 이를 해산하고 예배를 보러온 신도 4명을 강제연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밤 8시경 성남 주민교회와 산자교회 신도 50여명은 수요예배를 갖기 위해 성남 검찰청 앞에 모였다. 미리 대기중이던 4백여 명의 경찰병력은 이들을 검찰청 밖으로 밀어낸 뒤, 예배

를 위해 준비한 단상 및 마이크와 앰프 등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박연필(45) 집사 등 4명의 신도를 강제연행했다. 연행됐던 박 집사는 구류 3일을 선고받았다.  
또한 연행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남아 있던 20여명의 신도들이 27일 새벽 6시경 기도회를 시작하자, 경찰은 기도중이던 신도들을 강제로 끌어내 해산시켰다.

조창환(주민교회) 목사는 “이날 검찰청 앞엔 시위진압용 페퍼포그까지 동원됐고, 경찰 간부는 ‘목사고 뭐고 다 끌어내’라는 명령까지 내렸다”고 밝혔다. “기도회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5·6공 때도 없던 일”이라며 분노했다.  
성남 산자교회와 주민교회는 지난 12일부터 김해성 목사 석방과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성남검찰청 앞에서 수요예배를 진행해 왔으며 이후에도 검찰청 앞 수요예배를 지속할 예정이다.

### 회사 '5만원은 용돈' 주장 외국인노동자문제 진상조사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 및 상당지원활동담담 지지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 진상조사단'(단장 이명남, 조사단)을 구성하고 26일부터 조사활동에 들어갔다.

신승민(교회인권센터 사무국장) 목사는 “지난 13일 목요일기도회에서 (주)전방의 인도 산업연수생들로부터 월급 4만원을 받고 일한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며 “이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사단의 첫 활동은 구방기((주)전방) 공장장으로부터 사태배경을 듣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날 구 공장장은 “4만원이 아니라 5만원”이라며 “월급은 인도 현지공장장에서 부모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고, 한국에서 지급한 것은 한달 용돈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조사단은 산업연수생 제도의 타당성 여부와 도입현황에 대해 법무부 당국자들과 직접 면담을 벌일 예정이다.

구독료 납부!  
아래 지로로  
7618848

### <자료>유인순씨 사건 판결문 요약

## 즉심피의자 구금은 불법

<편집자주> 지난 21일 즉심피의자를 경찰서안 대기실에 구금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인순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서울지법은 소송 제기 3년여만에 5백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이유  
가.원고는 1993. 7. 26 15:40경 노원구 상계동 소재 당현대교앞 사거리에서 당시 그 곳을 운행하고 있던 한성여객 버스운전자가 원고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는 등 난폭한 운전을 하므로 항의하였으나 버스운전자는 오히려 원고에게 욕을 하는 등 모욕을 주었다.

나.원고는 그 즉시 이를 항의하기 위해 위 버스회사를 찾아갔는데 운전자가 대기실에서 배차담당직원에게 위 시내버스 운전자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마침 그 곳에 있던 위 버스회사의 운전기사인 김기정으로부터 여러 운전기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심한 욕설을 들었다.

다.같은 날 16:20경 노원경찰서 하계파출소에 찾아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심한 욕설을 한 위 김기정을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고 신고하였다.

라.마.바.(중략).  
사.순경 김주철은 같은 날 21:00경 위 김기정이 나타나자 원고 및 위 김기정에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후 별다른 이유의 설명도 없이 원고에게 금 2만5천원의 범칙금통고서를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자신이 피해자라는 이유로 범칙금의 납부를 거절당하자 원고에 대한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

하고 그 내용의 구체적인 고지나 서명날인도 하지 않은 채 같은 날 22:00경 원고와 김기정을 노원경찰서로 연행하였다.

아.김주철은 자신이 즉결심판에 회부되어야 하는 이유를 따지고 드는 원고를 잡고 강제로 그 곳 보호실로 밀어넣어 감금하려고 하였지만 원고의 완강한 반항으로 중도에서 일단 포기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원고의 팔이 보호실 창살에 부딪히는 등으로 타박상을 입고 원고가 입고 있던 스커트 단추가 떨어졌으며, 원고는 결국 보호실에 유치되었다.

자.(중략)  
2.판단

위 김주철은 원고를 즉결심판에 회부하려면 원고에게 그 이유 또는 법을 위반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즉결심판의 피고인인 원고는 법원에 불출석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원고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소정의 보호조치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경찰서 즉결심판대기실에 유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주철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그 다음날 즉결심판대기실에 사실상 감금시켰다 할 것이니 위 불법감금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그 소속 경찰공무원의 위와 같은 직무수행상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중략)  
1996.6.21. 판사 박보영

### 성추행 전교장 고발 신양중공대위, 구속수사 촉구

학생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황수연(55) 전 신양중 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27일 오후 「황수연 씨 구속수사와 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동대표 이수호등)는 황 교장을 성추행 및 공무원 직무유기, 수뢰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했다.

또한, 황 교장이 25일자로 교육부 교육연구관으로 전 보발령 받은 것과 관련해 공동위는 교육청에 황 교장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한편, 사법당국에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공동위는 27일 신양중 앞에서 거리캠페인을 가진 데 이어 7월 9일 교사들에 의한 성폭력 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기사정보 ☎ 715-9185

### 민주노총위원장 보석 당연 법원, 검찰 항고 기각

검찰이 제기한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의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가 지난 11일 서울지법 제7형사부에 의해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민주노총과 서울지방법원에 의하면 서울지법 제7형사부는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피고인은 주거가 분명한 뿐 아니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검사의 항고는 이유없다”고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법원의 이같은 결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양규현 수석부위원장의 보석허가도 즉시 받아들여질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는 노동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제3차 개입금지’ 적용에 의한 노조간부 구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18일에도 검찰이 권 위원장의 보석철회, 재수감을 운운했다며 검찰의 태도에 대해 비난했다.

### ○행사와 동정○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토론회
  - 일시:6월29일(토) 오후3시
  - 장소: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
  - 주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 우리땅 용산미군기지 퇴장기 대토론회
  - 일시:7월1일(월) 오후2시
  - 장소:기독교회관 2층(종로5가)
  - 주최:우리땅 용산미군기지 퇴장기 서울시민모임 준비모임(744-1211)
- 폭력없는 가정,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시민포럼
  - 일시:7월10일(수) 오후2시
  - 장소:기독교회관 2층(종로5가)
  - 주최:대우여성의 진화(053-475-8084)
- 나눔의 집 자원봉사자 모집
  - 정신대 할머니들이 모여사는 나눔의 집에서는 비디오 카메라로 할머니 8명의 증언을 책임있게 기록할 8명의 비디오 자원봉사요원을 모집한다. 문의: 0347-64-0064
- 봉천동 청소년 쉼터 차량 지원 요청
  - 봉천동 나눔의 집과 청소년쉼터에서는 자활지원센터와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기 위한 차량을 찾고 있다. 기증해주는 차량은 가난한 이웃들의 자립을 위해 귀중하게 쓰여질 것이라고 한다. 승용차나 트럭 모두 상관없다. 문의: 871-1596



### <인권하루소식> 96년 6월분 총목차(655-674호)

호	월일	면	기사 제목
655	6/1	1	수사기관 멋대로 집건제한, 나사청 회원 면회불허/공공부문노조 2일 대규모 집회, 해고자 복직·단결권 보장 요구/“쌀지원 허용하라” 전국연합 민간하용촉구/AI, 전학련등 석방 촉구, 좌경칙결발인 파장비난/전국연합통신 100호, 민족민주정론지로 출발
		2·3	<인권하루소식> 96년 5월분 총목차
656	6/4	1	학살자 처벌요구 단식농성, 전국연합 법원앞 집회·한총련 명동성당에서/안부편지 ‘통신’으로 깨닫추기, 2·3월 구속 사노맹 10명 집행유예/기아노동자 복직투쟁, 집단폭행으로 3명 입원
		2	인권협 시사뉴스 탄압중단 성명발표/민변 새집행부 구성, 회장에 최영도변호사/민언협, 강성구사장 즉각 퇴진 성명서 발표/항의방문자 전원연행, 나사청 불구속 7명/참여연대,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서명작업/주간인권호름(5월27일부터 6월2일까지)
657	6/5	1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결사저지, 경찰 불법채류자 2명 연행에 진경 5백명 출동
		2	노조활동 위축위한 손해소송 금호타이어측, 20억 판결을 임단협 무기로/박동화씨 장래, 가족·대구공전측 합의로 치뤄/PCS범국민대책위 15일 전국집회/한교협, 김해성목사 석방 촉구 규탄성명/공노대 대표단, OECD방문 프랑스·독일노조 ‘직권중재 철폐 적극 지원’/공공부문노조, 직권중재 철폐·공무원단결권 보장 요구하며 일제히 쟁의발생 신고
658	6/7	1	기무사, “제보자 알려주면 소송취하” 시사뉴스 발행인 연행 “땀땀이 싸우겠다”/외국인노동자 탄압 규탄 13일 공대위 결성/정대협, 아시아평화기금 중단촉구와 일본의원 망원 규탄
		2	현중, 쟁의발생 결의 무산 회사측 회유로 대의원들 대부분 불참/참여연대, 효산콘도 특혜 의혹 양심선언한 현 주사 복직 요구/범민련 씨말리기, 강순정씨등 2명 연행/<자료>-대법원 결정문 “피의자 접견권은 필수적 권리”
659	6/8	1	불심검문 불용 시민 집단폭행, 경찰관은 신분·동행장소·목적 등 밝혀야/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검사가 증인에게 압력행사 “그대로 진술 안하면 위증죄로 걸겠다”
		2	김해성목사 면담요구 교인 구속,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촉구/민족회의 통일정보 제공/경원대 사태, 폭력배 등장으로 총학생회장 목뼈 부상/PCS범대위 무한 농성, 정보통신특별법 위해 국회청원/KNCC 인권센터 출범, 인권침해 진상규명 등 주력
660	6/11	1	96 임단협 최대현안, 해고자복직 전해투·공해투 무기한 명동농성 돌입/LG해고자 돕던 이웃주민 고소/제2회 세계주거회의서 정부 ‘주거권’ 인정
		2	외노대 ‘보호법제정’ 농성, 정부 계속 단속 밝혀/전국연합, 악법철폐, 경제민주화 요구하는 6월항쟁 9주기 성명/시사뉴스사 “구속수사 공평치 않다”며 석방촉구/화력발전소 건설발대, 영흥도 주민 무기한 농성/주간인권호름(6월3일부터 9일까지)
661	6/12	1	교장이 상습적으로 제자 성추행 전교조, 황교장에 대한 처벌과 대책마련 요구/10일 PCS 사업자 발표에 각계 항의 “통신주권, 재벌에게 줄 수 없다”/경원대, 대하씨름부 출신 보디가드 고용
		2	살인누명 쓰고 13개월 동안 옥살이 한 김기용 순경 “폭행고문수사관 고소·고발, 2년 6개월동안 감감무소식/인권운동 길찾기 토론회, 청년·학생 연대필요
662	6/13	1	학교운영위 선출 민주적으로 부천고 교사, 운영위 조직·선출과정 문제 제기/AI, 법무부장관에게 항의서한/PCS범대위 정동부·LG 앞 시위/사노맹 구속자들 전원 석방 ‘사노맹은 와해된 조직’
		2	세계의 인권③ “사형제도-그러면 정부는 누가 죽이나요?”
663	6/14	1	천안전방 탈출 외국인산업연수생 증언 “공휴일에도 16시간 노동, 월급 4만원”/방북학생 항소심서 재판부 “연방제는 결국 공산주의하자는 것” 강변
		2	<암과 싸우는 농민운동가 최종진> 20년 농민운동에 헌신, “계획은 있다”



### <인권하루소식> 96년 6월분 총목차(655-674호)

호	월일	면	기사제목
664	6/15	1	"문체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작 못해" 푸른영상 대표 긴급구속, 편집기자채등 압수/전국연합, 정부의 이중적태도 비난하며 해고자 복직촉구/재독교민 7단체 "김해성목사 석방하라"며 김대통령에게 항의서한
		2	검찰, 시사뉴스 발행인 전과18범으로 허위기재한 구속영장으로 구속/해고자복지·민주적 노사개혁 요구하며 권영길위원장등 명동성당 농성돌입/인권간행물
665	6/18	1	교육·인권단체 참여해 신앙중공대위 결성 '교장퇴진, 학생인권보호 앞장'/민주노총 소속 1백8개 노조 임단협 타결, 비자금 조성 금지 등 사회적 책무조항 요구/주한미군범죄근절본부등 활동한 박순금 장로 운명/5회 불교인권상에 김창한 해고노동자 수상/의료인, 유니세프 통해 북한수재민 돕기 성금
		2	아태회의, 외국인노동자 문제 논의 "산연연수생제도 폐지해야"/박창희교수 상고 기각, 국가기밀 범위모호/민변, 해고자 복지 촉구 성명/주간인권호름(6월10일부터 16일까지)
666	6/19	1	푸른영상 대표 불구속 수사, 혐의는 음비법, 조사는 국보법/민주노총소속 노조, 20일 연대파업 결의 "노사개혁위 참여문제 고려하겠다"/전국연합, "광주와 무관하다"는 전두환씨 발언 항의
		2	<자료> 영장청구에 대한 의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667	6/20	1	인론, 만도 파업 쟁점호리기 회사 단체협상 위배 노조파업 불리/신양중 학생들 "성추행교장 퇴진" 한 목소리, 공대위 신앙중·시교육청 항의방문/통일관련 정보서비스 나우누리 "go onekr"
		2	<자료>-AI 고문 및 기타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의 의학적 조사에 관한 원칙 "의사는 고문에 가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668	6/21	1	표현의 자유 제한 철폐요구, 음비법 개폐 대책위 22일 구성/명동 외국인노동자 농성장을 찾아 "한국에 올 노동자들에게 줄 선물은..."/전국연합, 검찰 인권유린 빈번하다며 처벌 촉구/딸들을 위한 캠프, 여성의 전화 개최
		2	제7회 인권영화제 '영화 통한 인권의식 넓히기'
669	6/22	1	일수상 방한, '과거청산' 한 목소리, 위안부 법적배상·한일협정 폐기/한국통신 오용철폐 간담으로 18일 별세/"전국연합 자료집 제작·배포, 이적성 있다", 박충렬씨 정역 10년 구형
		2	<성명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실한 책임이행을 촉구하며/<세계주거회의 참관기>-이정운(참여연대)
670	6/25	1	"남은 여성 혈육과 보내고 싶다" 전쟁포로 3인 인권고등판무관에게 탄원서 제출/<3명 포로의 삶> "나는 이렇게 포로가 되었다"/제3자개입 혐의로 구속된 2명에 대해 AI, 노동법 개정 재촉구
		2	"해고자복지·임단협 논의하자" 민주노총, 경총에 공식대화 제의/WCC, 법무부장관에 김해성목사 석방촉구 항의서한 /주간인권호름(6월17일부터 23일까지)
671	6/26	1	ILO, 한국정부에 민주노총 합법화·제3자개입 금지 등 철폐 강력 권고
		2	마이크로전자 노조 지키기위한 총투쟁 전개, 노조위원장 음독자살 기도/서울시정 1년 여성정책평가, 보수적 여성관 여전/교수제임용제 개정 촉구, 학문자율·대하민주화 침해/충남지역 교사 설문조사, 교육감 선출 개선요구/결사의 자유위원회란?
672	6/27	1	"시위대, 이적단체일 수 있다", 도경 특별수사본부 설치해 남총련 최근 23명 구속/참여연대, 법률구조 개선방안 토론회 '법조인의 인식변화 진실'/어연 지은희대표 방일, 국민기금 반대 강연회/28일 남부노동법률상담소 개소식
		2	<자료>-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 및 집행이사회 결정사항(사건 번호 1865) "한국정부는 제3자 개입금지 철폐, 민주노총합법화 하라"
673	6/28	1	"목사고 뒤흔고 다 끌어내!" 경찰, 성남검찰청 앞 기도회 강제해산/올바른 교육감 선출을 위해 충남대책위 결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외국인노동자문제 진상조사
		2	<자료> 유인순씨 사건 판결문 요약, 즉심피해자 구금은 불법/신양중 공대위, 성추행 황교장 고발/법원 검찰 항고 기각, 민주노총위원장 보석 당연/행사와 동정
674	6/29	1	공안탄압 우려확산, 전남대 94년 학생회 간부 13명 긴급구속/경실련 등 '노조의 작업중지권 보장'촉구/난폭학생은 제외' 교육청 학생선고 교육/탄압에 인론 침묵, 시사뉴스사 유감표명
		2·3	96년 5월분 총목차(655-674호)

# 인권하루소식

## 합본 VI 색인

(제501호 - 제674호)